



수도권 거주인구·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정책 연구

연구진

홍근석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봉균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Contents

I	서론	
	1. 연구배경	04
	2. 연구목적	05
II	부산광역시 인구 현황 및 인구감소 영향	
	1. 인구 현황	07
	2. 인구이동 현황	15
	3. 인구감소의 영향	21
III	중앙정부 및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1. 중앙정부 인구정책	29
	2.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34
IV	일자리 관련 인구정책 및 사회적 인구증가 사례	
	1. 국내 인구정책 사례	39
	2. 국외 인구정책 사례	48
	3. 사회적 인구증가 사례	59
V	수도권 거주인구와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방안	
	1. 기본방향	65
	2. 추진방안	66
	참고문헌	73
부록	주요 지역별 주민등록인구 연평균 증가율 현황	74



서론

1. 연구배경

인구 감소 및 수도권 인구유출 증가

- 부산광역시의 주민등록인구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부산광역시 주민등록인구는 2016년 3,499천 명에서 2020년 3,392천 명으로 약 107천 명 감소하였음
 - 최근 5년간 부산광역시 주민등록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0.77% 로 전국 평균인 0.06% 보다 낮은 수준임
 -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대전(-0.84%)과 울산(-0.78%)에 이어 3번째로 인구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2020년 기준 부산광역시의 순이동인구는 $-14,347$ 명으로 유입인구보다 유출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부산광역시의 순이동인구는 2016년 $-21,392$ 명에서 2017년 $-28,398$ 명까지 증가하였으며, 유입인구보다 유출인구가 많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부산광역시에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으로 유출되는 인구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부산광역시 인근에 있는 경상남도 지역으로의 유출인구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냄
- 부산광역시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은 사회적 증감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자연적 증감에 의해서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적 부담 증가

- 부산광역시의 유소년 인구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생산가능인구의 유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음
 - 부산광역시의 유소년 인구는 2016년 402천 명에서 2020년 363천 명으로 연평균 -2.51%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유소년 인구 비중도 2016년 11.5%에서 2020년 10.7%로 0.8%p 감소하였음
 - 생산가능인구 역시 2016년 2,560천 명에서 2020년 2,371천 명으로 연평균 -1.90%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생산가능인구 비중도 2016년 73.2%에서 2020년 69.9%로 3.3%p 감소하였음
-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규모와 비중 측면에서 모두 증가하고 있음
 - 부산광역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2016년 536천 명에서 2020년 658천 명으로 연평균 5.25%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65세 이상 인구 비중도 2016년 15.3%에서 2020년 19.4%로 4.1%p 증가하였음
 - 65세 이상 노인인구 1명을 부양하기 위한 생산가능인구 수는 2016년 4.78:1에서 2020년 3.60:1로 감소하였음
 - 즉,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연구목적

부산광역시 인구구조 및 인구이동 현황 분석

- 최근 5년 간 부산광역시 인구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분석을 실시함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부산광역시 주민등록인구 변화 추이를 검토함

- 유소년인구(0~14세), 생산가능인구(15~64세), 노인인구(65세 이상) 등 연령별 인구 변화 추이를 검토함
- 그리고 부산광역시의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주로 사회적 감소로 인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인구이동 추이를 분석하고자 함
- 부산광역시 유출인구의 대부분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출 지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자 함

인구 및 기업 유치 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

- 중앙정부의 「제3기 인구정책 TF 추진계획」 및 부산광역시의 「인구정책 추진계획」 등을 검토하고자 함
 - 특히 제3기 인구정책 TF는 수도권 거주인구와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¹⁾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임
 - 「제3기 인구정책 TF 추진계획」에 대한 검토를 통해 중앙정부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인구·기업 유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인구 및 기업 유치와 관련된 국내외 주요 사례를 검토하고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및 기업에 대한 주요 지원 정책을 검토하고자 함
 -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주요 지원 정책을 검토하고자 함

인구 및 기업 유치를 위한 부산광역시 특화 추진과제 개발

- 부산광역시 인구 현황에 대한 분석과 인구 및 기업 유치를 위한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부산광역시에 적용할 수 있는 주요 추진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다양한 지원 정책 중 일자리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과제를 검토하고자 하며, 개인과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함

1) www.newsworks.co.kr '여성-베이비붐 세대 노동시장 이탈 막는다...3기 인구정책 TF 출범'

II

부산광역시 인구 현황 및 인구감소 영향

1. 인구 현황

주민등록인구 현황

- 부산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인구수는 2016년 3,499천 명에서 2020년 3,392천 명으로 약 107천 명 감소하였음
 - 최근 5년 간 주민등록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제주 등 5개 지역이며, 나머지 12개 지역은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임
- 부산광역시 주민등록인구의 연평균 증감률은 -0.77%로 대전(-0.84%), 전북(-0.82%), 울산(-0.78%) 등과 함께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표 2-1 | 주민등록인구 추이 •

(단위: 천 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증감률
서울	9,931	9,857	9,766	9,729	9,668	-0.67
부산	3,499	3,471	3,441	3,414	3,392	-0.77
대구	2,485	2,475	2,462	2,438	2,418	-0.67
인천	2,943	2,949	2,955	2,957	2,943	0.00
광주	1,469	1,464	1,459	1,456	1,450	-0.33
대전	1,514	1,502	1,490	1,475	1,464	-0.84
울산	1,172	1,165	1,156	1,148	1,136	-0.78
세종	243	280	314	341	356	10.00
경기	12,717	12,874	13,077	13,240	13,427	1.37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증감률
강원	1,551	1,550	1,543	1,542	1,543	-0.13
충북	1,592	1,594	1,599	1,600	1,601	0.14
충남	2,097	2,117	2,126	2,124	2,121	0.29
전북	1,865	1,855	1,837	1,819	1,804	-0.82
전남	1,904	1,896	1,883	1,869	1,852	-0.69
경북	2,700	2,692	2,677	2,666	2,639	-0.57
경남	3,374	3,380	3,374	3,363	3,340	-0.25
제주	642	657	667	671	675	1.26
전국	51,698	51,778	51,826	51,852	51,829	0.06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연령대별 인구 현황

- 부산광역시의 유소년인구(14세 이하)는 2016년 402천 명에서 2020년 363천 명으로 약 39천 명 감소하였음
 - 부산광역시 유소년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2.51%로 전국 평균인 -2.28%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유소년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표 2-2 | 유소년인구(14세 이하) 추이 •

(단위: 천 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증감률
서울	1,157	1,119	1,071	1,033	995	-3.69
부산	402	392	382	372	363	-2.51
대구	321	314	304	295	285	-2.95
인천	404	395	385	375	363	-2.61
광주	220	214	207	201	195	-2.97
대전	218	210	201	192	184	-4.05
울산	171	168	163	159	154	-2.55
세종	50	58	65	70	72	9.62
경기	1,886	1,868	1,854	1,828	1,807	-1.06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증감율
강원	190	184	179	174	170	-2.71
충북	215	210	206	201	196	-2.20
충남	295	293	289	281	274	-1.83
전북	245	237	228	220	212	-3.59
전남	239	233	226	218	212	-2.97
경북	333	326	316	308	299	-2.69
경남	473	466	455	443	430	-2.36
제주	98	99	98	97	96	-0.60
전국	6,917	6,786	6,629	6,467	6,307	-2.28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부산광역시의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64세 이하)는 2016년 2,560천 명에서 2020년 2,371천 명으로 약 189천 명 감소하였음
 - 부산광역시 생산가능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1.90%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5년 간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세종, 경기, 제주 등 3개 지역이며, 나머지 14개 지역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임

• 표 2-3 |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64세 이하) 추이 •

(단위: 천 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증감율
서울	7,478	7,378	7,285	7,217	7,112	-1.25
부산	2,560	2,513	2,470	2,422	2,371	-1.90
대구	1,835	1,814	1,795	1,764	1,733	-1.41
인천	2,215	2,209	2,207	2,197	2,168	-0.53
광주	1,077	1,069	1,065	1,060	1,050	-0.64
대전	1,125	1,112	1,101	1,084	1,069	-1.28
울산	892	880	868	856	838	-1.55
세종	169	195	220	239	249	10.17
경기	9,456	9,538	9,671	9,760	9,845	1.01
강원	1,094	1,086	1,075	1,064	1,053	-0.97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증감율
충북	1,136	1,132	1,132	1,126	1,116	-0.44
충남	1,452	1,461	1,465	1,456	1,442	-0.17
전북	1,278	1,266	1,250	1,229	1,206	-1.45
전남	1,265	1,255	1,244	1,228	1,203	-1.25
경북	1,875	1,853	1,831	1,808	1,767	-1.47
경남	2,421	2,410	2,396	2,372	2,330	-0.95
제주	454	465	473	474	473	1.00
전국	37,782	37,636	37,548	37,356	37,025	-0.50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반면 부산광역시의 노인인구(65세 이상)는 2016년 536천 명에서 2020년 658천 명으로 약 122천 명 증가하였음
 - 부산광역시 노인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5.25%로 전국 평균인 4.98%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부산광역시를 포함해서 울산, 인천, 대전 등 광역시의 노인인구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부산광역시의 노인인구 비율은 2016년 15.3%에서 2020년 19.4%로 약 4.1%p 증가하였음
 - 부산광역시의 노인인구 비율은 특별·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전국 평균인 16.4%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표 2-4 | 노인인구(65세 이상) 추이 •

(단위: 천 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증감율
서울	1,296	1,360	1,410	1,479	1,561	4.77
부산	536	566	590	620	658	5.25
대구	329	347	363	379	400	5.05
인천	324	345	363	385	411	6.14
광주	173	181	187	195	206	4.48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증감율
대전	172	181	189	199	211	5.28
울산	109	117	124	133	143	7.15
세종	24	27	29	32	35	9.57
경기	1,374	1,468	1,552	1,651	1,775	6.61
강원	266	280	289	303	320	4.69
충북	241	252	262	273	288	4.60
충남	350	363	373	387	405	3.72
전북	341	351	358	371	386	3.15
전남	399	408	413	423	436	2.24
경북	492	513	529	549	574	3.89
경남	480	504	523	548	580	4.84
제주	89	93	96	100	106	4.45
전국	6,995	7,356	7,650	8,027	8,495	4.98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부산광역시의 유소년인구와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노인인구는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지역경제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생산가능인구와 잠재적인 생산가능인구인 유소년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음
 -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부산광역시의 경제여건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인 동시에,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부담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음

• 표 2-5 | 부산광역시 인구구조 추이 •

(단위: 천 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증감율
유소년인구	402(11.5)	392(11.3)	382(11.1)	372(10.9)	363(10.7)	-2.51
생산가능인구	2,560(73.2)	2,513(72.4)	2,470(71.8)	2,422(70.9)	2,371(69.9)	-1.90
노인인구	536(15.3)	566(16.3)	590(17.1)	620(18.2)	658(19.4)	5.25
계	3,499	3,471	3,441	3,414	3,392	-0.77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이와 함께 부산광역시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16년 0.84에서 2020년 0.63으로 0.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지방소멸위험지수가 0.5 이하일 경우 소멸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산광역시는 0.63으로 지방소멸위험 주의 단계임
 - 지난 5년간의 감소 속도가 지속될 경우 부산광역시는 곧 소멸위험 진입 단계(0.2~0.5 미만)에 들어설 것으로 예측됨

• 표 2-6 | 지방소멸위험지수 추이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서울	1.18	1.11	1.07	1.01	0.95
부산	0.84	0.78	0.74	0.68	0.63
대구	0.96	0.89	0.85	0.78	0.73
인천	1.27	1.19	1.12	1.04	0.94
광주	1.17	1.10	1.05	0.99	0.93
대전	1.22	1.14	1.08	0.99	0.92
울산	1.41	1.29	1.18	1.06	0.94
세종	1.51	1.56	1.60	1.55	1.43
경기	1.29	1.20	1.15	1.08	1.00
강원	0.64	0.60	0.57	0.53	0.49
충북	0.79	0.75	0.72	0.67	0.62
충남	0.71	0.69	0.66	0.62	0.58
전북	0.62	0.59	0.56	0.53	0.49
전남	0.50	0.48	0.46	0.44	0.41
경북	0.60	0.57	0.53	0.50	0.45
경남	0.84	0.79	0.74	0.69	0.62
제주	0.88	0.86	0.85	0.80	0.75

주 : 지방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으로 1.5 이상이면 소멸위험 매우 낮음, 1.0~1.5 미만이면 소멸위험 보통, 0.5~1.0 미만이면 주의 단계, 0.2~0.5 미만이면 소멸위험 진입 단계, 0.2 미만이면 소멸 고위험 지역을 의미함(홍근석·김봉균, 2020)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지역별 인구 현황

- 부산광역시 구군의 주민등록인구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음
 - 영도구의 연평균 증가율이 -2.68%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사상구(-2.25%)와 북구(-2.19%) 등의 순서로 나타났음
 - 반면 강서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6.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기장군(2.44%)과 연제구(0.23%) 등의 순서로 나타났음

• 표 2-7 | 부산광역시 구군별 주민등록인구 추이 •

(단위 : 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가율
중구	45,208	44,218	42,795	41,910	41,523	-2.10
서구	112,973	110,039	110,534	108,229	108,135	-1.09
동구	89,826	88,868	86,912	88,165	88,901	-0.26
영도구	126,362	123,521	120,109	116,711	113,342	-2.68
부산진구	376,526	371,703	362,357	357,880	359,886	-1.12
동래구	272,745	270,727	266,515	271,247	270,745	-0.18
남구	278,779	273,854	279,917	274,480	267,731	-1.01
북구	310,202	302,924	296,952	291,132	283,952	-2.19
해운대구	419,853	412,039	409,347	406,102	402,169	-1.07
사하구	334,603	333,301	327,791	321,004	311,757	-1.75
금정구	244,624	244,469	242,956	239,062	232,666	-1.25
강서구	108,909	117,382	122,957	129,566	137,957	6.09
연제구	207,268	206,742	207,840	209,395	209,157	0.23
수영구	179,324	179,996	176,246	176,148	176,894	-0.34
사상구	232,800	229,219	223,361	218,094	212,586	-2.25
기장군	158,527	161,651	164,864	164,716	174,545	2.44
계	3,498,529	3,470,653	3,441,453	3,413,841	3,391,946	-0.77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도시구조 다핵화, 외연 확산 및 도심공동화로 원도심의 인구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영도구의 2019년 인구는 2010년 대비 -21%로 나타났으며, 중구와 사상구 역시 -15% 수준으로 인구가 많이 감소하였음
 - 반면 강서구(107%)와 기장군(61%)의 2019년 인구는 2010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규모 택지개발 및 경제개발사업 등의 영향임
 - 인구 감소폭이 큰 원도심은 노인인구와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반면에, 인구증가 지역인 강서구(19.5%)와 기장군(17.2%)은 유소년인구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 표 2-8 | 부산광역시 구·군별 인구 변화(2010년 대비 2019년 증감 현황) •

구분	지역
-21% ~ -16%	영도구(-21%)
-15% ~ -11%	중구(-15%), 사상구(-15%), 서구(-14%), 동구(-13%), 사하구(-11%)
-10% ~ -6%	부산진구(-10%), 남구(-8%), 북구(-7%), 금정구(-6%)
-5% ~ -1%	해운대구(-5%), 동래구(-4%), 연제구(-2%), 수영구(-1%)
증가	기장군(61%), 강서구(107%)

자료 : 부산광역시(2020). 부산 인구활력 추진계획

인구증감 현황

- 부산광역시의 인구감소는 대부분 전입·전출에 의한 사회적 증감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19년에는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23,354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15년까지는 출생인구가 사망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9년 이후 부터는 사망인구가 출생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부산광역시 인구의 감소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 표 2-9 | 부산광역시의 인구증감 현황 •

(단위 : 명)

구분	'10년	'15년	'19년	'20. 6.
인구증감	24,880	-5,624	-27,612	-9,418
자연적 증감(출생-사망)	7,707	5,825	-5,113	-3,530
사회적 증감(전입-전출)	-28,466	-13,560	-23,354	-5,777
기타(국제이동 등)	45,639	2,111	855	-111

자료 : 부산광역시 내부자료

2. 인구이동 현황

전입·전출 현황

- 최근 5년간 부산광역시의 순이동인구는 -114,250명이며, 경남과 수도권 지역으로의 인구유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5년 동안 경남 지역으로의 순이동인구는 -50,954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31,055명)과 경기(-21,408명) 등의 순서임
 - 2019년까지는 경남 지역으로의 인구유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0년에는 서울 지역으로의 인구유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대구, 광주, 울산, 경북 등 4개 지역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로 유입되는 인구가 유출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표 2-10 | 부산광역시 인구의 사회적 증감(전입-전출) •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서울	-4,174	-4,976	-6,644	-7,480	-7,781	-31,055
대구	244	334	200	946	779	2,503
인천	-476	-374	-795	-890	-599	-3,134
광주	164	62	106	110	40	482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대전	-404	-397	-572	-429	-289	-2,091
울산	231	1,044	591	450	2,484	4,800
세종	-512	-419	-413	-321	-367	-2,032
경기	-2,916	-2,984	-4,801	-5,150	-5,557	-21,408
강원	63	-193	-8	-266	-288	-692
충북	-318	-390	-574	-427	-308	-2,017
충남	-950	-939	-967	-896	-672	-4,424
전북	-22	-21	11	-86	-201	-319
전남	-101	-85	-292	-355	-97	-930
경북	-116	-200	-174	80	812	402
경남	-11,010	-17,896	-11,581	-8,200	-2,267	-50,954
제주	-1,095	-964	-846	-440	-36	-3,381
합계	-21,392	-28,398	-26,759	-23,354	-14,347	-114,250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표 2-11 | 전국 인구의 사회적 증감(전입-전출) •

(단위 : 명)

구분	지역	2016	2017	2018	2019	2020
서울	수도권	-147,662	-115,942	-144,034	-95,765	-110,958
	비수도권	7,405	17,456	33,804	46,177	46,108
부산	수도권	-7,566	-8,334	-12,240	-13,520	-13,937
	비수도권	-13,826	-20,064	-14,519	-9,834	-410
대구	수도권	-5,881	-7,942	-10,076	-12,472	-13,342
	비수도권	-3,379	-3,994	-4,166	-11,201	-3,493
인천	수도권	10,359	1,916	-753	-4,384	-15,322
	비수도권	-4,582	-3,586	686	2,047	-426
광주	수도권	-4,168	-5,184	-7,346	-7,367	-7,711
	비수도권	-3,730	-2,934	1,130	3,492	1,628
대전	수도권	-1,509	-3,081	-4,931	-7,422	-8,055
	비수도권	-9,122	-13,094	-9,822	-8,920	-3,042
울산	수도권	-2,946	-5,144	-5,780	-6,521	-6,128
	비수도권	-4,676	-6,773	-6,874	-3,651	-7,456

구분	지역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종	수도권	7,685	6,502	5,308	3,569	1,057
	비수도권	22,131	28,188	26,125	20,155	11,968
경기	수도권	137,303	114,026	144,787	100,149	126,280
	비수도권	-3,686	2,136	25,307	34,517	42,093
강원	수도권	3,217	3,030	-2,466	198	2,721
	비수도권	-1,325	-995	-1,388	1,463	2,736
충북	수도권	4,865	3,629	2,528	-157	-598
	비수도권	146	-1,367	2,621	2,722	4,052
충남	수도권	11,066	12,855	5,357	-4,082	-3,904
	비수도권	4,252	6,546	4,727	3,288	4,645
전북	수도권	-1,855	-3,228	-7,992	-8,532	-7,224
	비수도권	-2,564	-3,978	-5,781	-4,216	-1,270
전남	수도권	-2,456	-2,218	-4,971	-4,929	-5,570
	비수도권	-749	-829	-3,059	-3,859	-4,184
경북	수도권	-3,495	-7,007	-10,815	-10,227	-13,966
	비수도권	344	1,426	1,590	5,656	-3,012
경남	수도권	-5,303	-8,564	-11,685	-12,629	-13,522
	비수도권	7,075	12,543	5,875	3,319	-3,136
제주	수도권	9,209	8,680	5,312	1,350	2,404
	비수도권	5,423	5,325	3,541	1,586	974
전국	수도권	863	-16,006	-59,797	-82,741	-87,775
	비수도권	-863	16,006	59,797	82,741	87,775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는 경우 부산광역시의 인구유출은 다소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최근 5년 동안 인구유입보다 인구유출이 많은 지역은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전북, 전남 등 6개 지역임
 - 이 중에서 수도권 지역으로의 인구유출이 가장 심한 지역이 부산광역시인 것으로 나타났음
 - 부산광역시는 2020년에 수도권으로의 유출인구가 유입인구보다 13,937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인구유출 원인

- 부산광역시의 인구유출은 경남과 수도권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
 - 2019년까지는 경남 지역으로의 인구유출이 가장 많았으나, 2020년부터는 수도권 지역으로의 인구유출이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20년 기준 순유출인구의 97.1%(13,937명)가 수도권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경남 지역으로의 인구유출은 양산시로의 전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08년 양산선 개통 이후 양산시로의 순유출인구는 약 9만 명 수준임
 - 양산시로 전출하는 주된 사유는 주택문제이며, 30대의 유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²⁾
 - 양산 신도시 입주가 완료되어 2018년 이후 양산시로의 유출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향후 양산 시송지구(2021년)와 노포-양산선(2024년) 준공 시 인구유출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은 서울특별시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20년 기준 서울특별시로 순인구이동은 -7,781명으로 부산광역시 유출인구의 54.2%를 차지하고 있음
 - 수도권으로 전출하는 주된 사유는 직업문제이며, 20대의 유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³⁾
 - 수도권에 주요기업(100대 기업의 83%), 연구개발 투자(69%), 신규 투자(76%), 교통(항공편 60%) 등 경제·산업·혁신동력이 집중되어 있어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2) 2019년 기준으로 양산시로의 전출 사유는 주택(49%), 가족(31%), 직업(18%) 등의 순서로 제시되었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24%), 50대(19%), 20대(17%) 등의 순서로 나타났음(부산광역시, 2020)

3) 2019년 기준 수도권으로의 전출 사유는 직업(70%), 교육(22%), 주택(11%) 등의 순서로 제시되었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41%), 30대(20%), 40대(11%) 등의 순서로 나타났음(부산광역시,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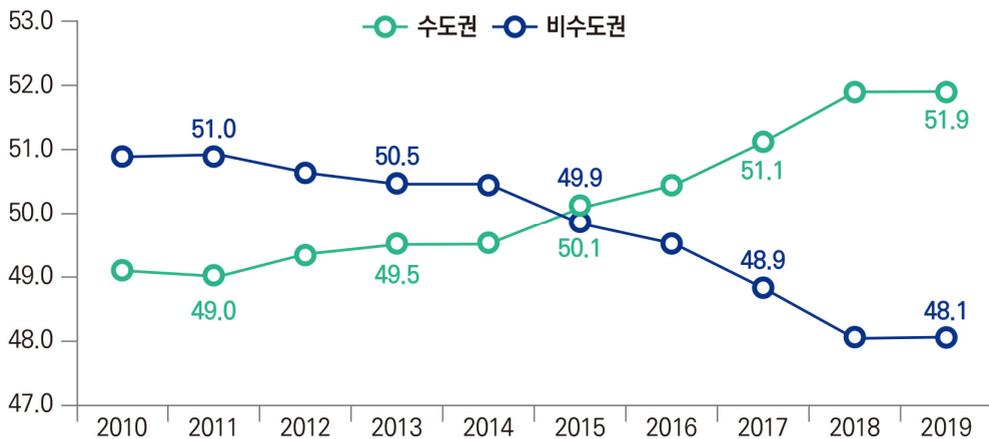
- 이로 인해 비수도권 5대 광역시의 수도권 인구유출은 2016년 11,711명에서 2020년 64,495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부산광역시도 주력산업 침체, 대학 경쟁력 약화 등으로 수도권 지역으로의 인구유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표 2-12 | 경제·산업 등 주요 분야의 수도권 집중 현상 •

구분	100대 기업	연구개발투자	신규투자	신규 고용	교통(항공)
수도권 비중	83%	69%	76%	65%	60%

자료 : 부산시(2021). 부산 인구정책 브리핑(창간호)

• 그림 2-1 |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 비중 추이 •



자료 : 통계청 국민대차대조표, 관계부처 합동(2021)에서 재인용

- 특히 수도권 지역으로의 인구유출은 20대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미래의 성장동력이 수도권 지역으로 전출한 뒤 돌아오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15~34세의 순이동인구는 -110,528명으로 나타나 매년 1만 명 이상의 청년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음
 - 그리고 2016년 기준 수도권 대학졸업자의 수도권 잔존율은 90%로 나타나 수도권 대학입학 시 지역으로의 회귀율이 매우 낮은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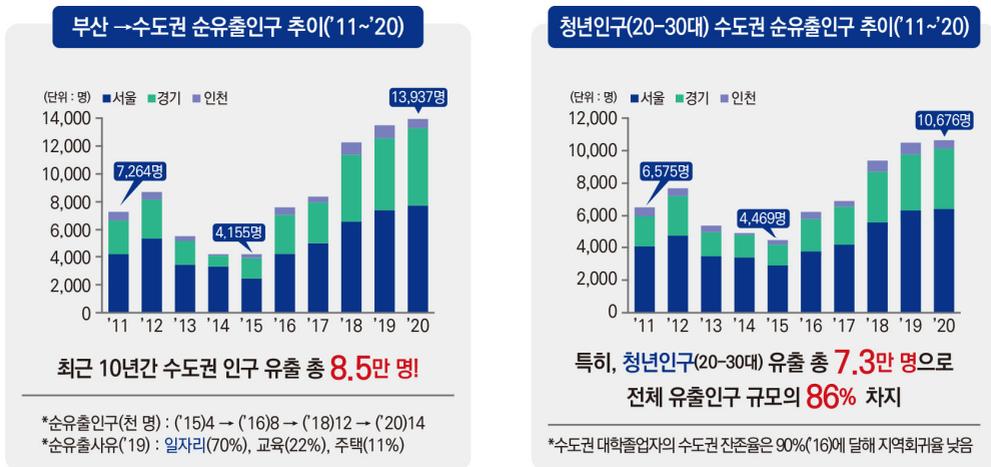
• 표 2-13 | 부산광역시 연령대별 사회적 증감(전입-전출) •

(단위 : 명)

구분	전체연령	0~14세 (유아·아동)	15~34세 (청년조례)	35~64세 (중장년)	65세 이상 (노인)	20~39세 (20·30대)
2010	-28,466	-1,709	-16,607	-8,788	-1,362	-17,323
2011	-24,863	-374	-14,855	-8,063	-1,571	-14,991
2012	-20,610	173	-13,242	-6,679	-862	-14,141
2013	-17,710	871	-10,694	-6,728	-1,159	-11,416
2014	-15,092	679	-8,626	-5,674	-1,471	-9,031
2015	-13,560	1,385	-6,965	-6,267	-1,713	-7,658
2016	-21,392	-672	-8,842	-9,289	-2,589	-9,852
2017	-28,398	-3,035	-9,985	-12,991	-2,387	-12,311
2018	-26,759	-1,249	-11,005	-12,047	-2,458	-13,612
2019	-23,354	-1,045	-9,707	-10,559	-2,043	-12,003
합계	-220,204	-4,976	-110,528	-87,085	-17,615	-122,338

자료 : 부산광역시 내부자료

• 그림 2-2 | 부산광역시 순유출인구 추이 •



자료 : 부산시(2021), 부산 인구정책 브리핑(청간호)

3. 인구감소의 영향

인구이동 영향요인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는 이주의 유형과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시하였음(홍근석·김봉균, 2020)
 - 이주의 원인 또는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적 요인, 사회정치적 요인, 생태학적 요인 등으로 구분되며, 이 연구에서는 국내 이주와 연관성이 높은 경제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표 2-14 | 이주 영향요인 : 경제적 요인 •

구분	지역 외부로의 이주요인(유출) (Push factors)	지역 내부로의 이주요인(유입) (Pull factors)
	실업과 일자리 부족 (Unemployment or lack of employment)	일자리 기회 (Job opportunities)
경제적 요인 (Economic factors)	농촌지역의 빈곤 (Rural poverty)	더 높은 소득과 수입 전망 (Better income and prospects for wealth creation)
	불안정한 생계 (Unsustainable livelihood)	신산업 분야의 혁신 및 기술 노하우 (Industrial innovation and technical know-how for a new industry)
	-	전문적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 (Pursuit of specialized education)

자료 : World Economic Forum(2017), 「Migration and Its Impact on Cities」, p. 31, 홍근석·김봉균(2020), 「수도권 핵심 생산연령인구 제주 이주의향 조사 분석 및 정책개발」에서 재인용

- 이주의 영향요인 중 경제적 요인은 한 장소의 노동시장, 고용상황 및 전반적 경제 여건과 관련이 있음(홍근석·김봉균, 2020)
 - 임금인상, 고용기회 및 부의 창출에 대한 전망 등 이주지역의 호의적인 경제 조건과 거주지역의 사회·정치적 상황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욕구는 이주민을 목적지로 끌어 들일 수 있음
 - 마찬가지로 거주지역의 경제적 여건이 불리하다면 가난하고 직업이 없는 개인들은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주할 수밖에 없을 것임

- 경제적 유출요인은 ① 실직 또는 부족한 취업기회, ② 농촌지역의 빈곤, ③ 지속 불가능한 생계를 포함함
- 경제적 유입요인은 ① 고용기회, ② 소득개선과 부의 창출에 대한 전망, ③ 새로운 산업을 위한 산업혁신 및 기술 노하우, ④ 전문 교육 추구를 포함함

인구감소의 영향

- 인구구조 변화 및 인구감소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축소사회 도래에 따른 분야별 비효율 발생, 비수도권 경쟁력 약화 및 수도권 과밀혼잡 등을 초래할 수 있음(관계부처 합동, 2021)
 - 생산연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주요 경제활동인구(25~49세)의 감소율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어 노동공급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됨
 -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등 교육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이 불가피하며, 인력 부족 및 고령화 산업 분야에 대한 대응책이 요구됨
 - 무엇보다 비수도권은 수도권으로의 인력유출로 경쟁력이 약해지고, 이로 인해 다시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을 경험할 것으로 예측됨⁴⁾
 - 지역 내 인구감소는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의료·교육·문화·교통 등 전반적인 생활여건 악화를 초래함
- 이론적 측면에서 지역 내 인구유출로 인한 인구감소는 지역내총생산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Lee & Sugiura, 2018)
 - 특정 시기 t에서의 지역내총생산은 $Y(t) = \alpha(t) \times H(t) \times E(t)$ 로 표현할 수 있으며, α 는 노동생산성, H는 노동시간, E는 근로자 수를 의미함
 - N과 L을 각각 15세 이상 인구수와 경제활동인구라고 정의할 경우, 경제활동참가율 ($\beta=L/N$)과 고용률($e=E/L$)을 도출할 수 있음

4) <https://blog.naver.com/kys3623/222435482024>, "2021년 저출산 고령화 심화와 인구구조 변화"

- 지역내총생산 함수는 $Y(t) = \alpha(t) \times H(t) \times \beta(t) \times e(t) \times N(t)$ 로 표현될 수 있으며, 양변에 로그를 취한 후 t로 미분하면 지역내총생산 성장률(growth rate)은 각 변수의 성장률에 대한 합으로 표현될 수 있음($\frac{\dot{Y}}{Y} = \frac{\dot{\alpha}}{\alpha} + \frac{\dot{H}}{H} + \frac{\dot{\beta}}{\beta} + \frac{\dot{e}}{e} + \frac{\dot{N}}{N}$)
- 즉, 노동생산성(α), 근로시간(H), 경제활동참가율(β), 고용률(e), 15세 이상 인구수(N)가 증가할 경우 지역내총생산이 증가함(홍근석·김봉균, 2020)
- 지역 내 인구 유출, 특히 청년인구의 유출은 해당 지역의 인구 고령화를 야기하고 경제 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을 감소시킴(홍근석·김봉균, 2020)
 - 인구 고령화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만약 노동생산성이 인구감소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키는 수준까지 충분히 증가하지 못할 경우 지역내총생산은 감소하게 되며, 결국 전반적인 지역경제는 쇠퇴하게 됨
 - 인구감소는 더 많은 인구의 유출을 자극하는 추가적 효과를 발생시킴
-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재배치를 통해 교외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음(Masuda, 2014)
 - 도시지역으로부터 교외지역으로 이주한 경험이 있는 청년인구를 대상으로 교외 지역으로의 재이주를 장려하는 정책들을 포함함
 - 이와 같은 인구의 재배치는 교외지역의 인구감소와 도시지역의 인구과밀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음(홍근석·김봉균, 2020)

인구이동과 일자리의 관계

- 특정 지역의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수요 접근방법과 공급 접근방법으로 구분됨(안기돈·오정일, 2006)
 - 수요 측면에서는 지역별로 주력산업이 다르기 때문에 거시경제적인 외생적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그 효과는 지역별로 다르며, 일자리 수 변화도 지역마다 다르고 이에 따라 인구의 유입·유출이 발생한다고 설명함
 - 공급 측면에서는 일자리 수의 변화는 인구이동에 의해 초래된다고 주장함

- 안기돈·오정일(2006)의 연구에서는 인구이동과 일자리 수 변화 간 인과관계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음
 - 대전 등 충청권의 경우는 인구유입에 의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으로(안기돈·오정일, 2006) 나타난 반면에, 광주 등 서남권의 경우는 일자리 수 변화에 의해서 인구이동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부산 등 동남권은 일자리 수 변화가 인구이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리고 인구이동의 일자리 수 변화에 대한 탄력성은 부산이 높은 반면, 대구와 광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즉, 부산의 경우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이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의 일자리가 유입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두 변수 간의 장기균형 관계를 이용하여 탄력성을 추정하였음
 - 두 변수 간의 장기균형 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은 구조식을 통해 살펴보는 방법과 시계열 분석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구조식을 통한 경우 여러 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다량의 자료확보가 요구되고 추정오차에 대한 영향이 큰 단점이 있음
 - 반면 시계열 분석은 직관적으로 두 변수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두 변수 간 관계 외의 영향 분석은 불가능한 단점이 있음

- 이 연구는 두 변수의 공적분 관계를 바탕으로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음
 - ARDL(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model)을 기반으로 공적분을 검증할 경우 기존 방법과 달리 I(1), I(0)을 사전에 판별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음
 - ARDL의 EC(Error Correction) 형식은 식 (1)과 같음

$$\Delta y_t = \alpha - \gamma(y_{t-1} - \theta x_t) + \sum_i w_i \Delta y_{t-i} + \sum_j \beta_j \Delta x_{t-j} + \varepsilon_t \dots\dots\dots (1)$$

- y 는 종속변수로 부산광역시의 총전입에서 총전출을 차감한 순유입인구를 나타내고, x 는 독립변수로 전국 대비 부산광역시 취업자 수 비율을 의미함
- 인구가동과 취업자 수는 통계청의 국내인구가동통계와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대한 1989년부터 2020년까지 분기별 데이터를 활용하였음
- 조정속도가 $\gamma = 1 - \sum \phi$ 로 주어질 때 종속변수(순유입인구)와 독립변수(일자리비율) 사이의 장기균형관계를 나타내는 장기효과계수는 $\theta = \frac{\sum \beta}{\gamma}$ 와 같음

• 표 2-15 | 순인구유입과 일자리비율 간 ARDL모형 추정 결과 •

구분	계수	표준오차	p-value
조정속도(γ)	-0.354	0.065	0.000
장기효과계수(θ)	-367.437	52.518	0.000
단기효과계수(w_i)	-0.295	0.078	0.000

- 분석모형에 대한 Bounds test(Pesaran, Shin, and Smith, 2001)의 F-statistic은 16.10으로 두 변수 사이에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1% 수준에서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w_i 와 β_i 의 lag길이는 Akaike Information criterion(AIC)을 기준으로 판별하였고 순인구유입과 일자리비율의 계절성(seasonality)은 제거하였음

• 표 2-16 | Bounds Test 결과 •

구분	통계치	1% 임계치
F-stat	16.100	8.008
T-value	-5.417	-3.855

- <표 II-15> 결과를 이용하여 평균값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순인구유입의 일자리비율 탄력성을 도출하였음
- 분석기간 동안 전국 대비 부산광역시 취업자 수 비율의 평균은 0.073이고 순유입 인구의 평균은 -8,356으로 순인구유입의 일자리비율 탄력성은 약 3.2%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전국 대비 부산광역시 취업자 수 비율이 1% 증가할 경우 부산광역시로의 순인구유입이 약 3.2%(267명)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함
- 전국 대비 부산광역시의 취업자 수 비율의 평균값이 0.073에서 0.074로 1% 증가할 경우 부산광역시의 취업자 수는 약 1,680명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부산광역시에서 일자리 100개가 창출될 경우 약 16명의 인구유입이 발생하는 효과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부산광역시 일자리 현황

- 2020년 기준 부산광역시의 청년 경제활동인구는 398천 명임
 - 부산광역시의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은 2016년 54.1%에서 2020년 53.4%로 0.7%p 감소하였음
 - 2017년을 제외하고 부산광역시의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2020년 기준 부산광역시의 청년 고용률은 49.1%임
 - 청년 고용률 또한 2016년 49.9%에서 2020년 49.1%로 0.8%p 감소하였음
 - 최근 5년 간 부산광역시의 청년 고용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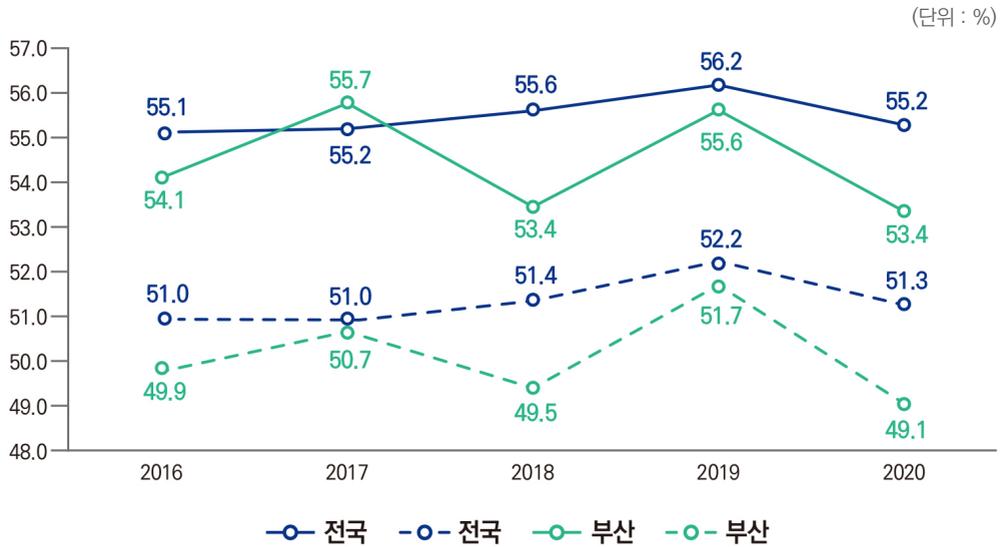
• 표 2-17 | 부산광역시 청년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 추이 •

(단위: 천 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7,174 (55.1)	7,037 (55.2)	6,941 (55.6)	6,932 (56.2)	6,733 (55.2)
	취업자 (고용률)	6,640 (51.0)	6,500 (51.0)	6,416 (51.4)	6,438 (52.2)	6,258 (51.3)
부산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458 (54.1)	456 (55.7)	421 (53.4)	426 (55.6)	398 (53.4)
	취업자 (고용률)	422 (49.9)	415 (50.7)	390 (49.5)	396 (51.7)	366 (49.1)

주 :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지칭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 그림 2-3 | 부산광역시 청년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추이 •



주 :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은 실선, 청년 고용률은 점선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 부산광역시에는 종사자 10인 이하의 영세한 사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19년 기준 10인 이하 사업체는 268,300개로 부산광역시 전체 사업체의 92.41%로 전국 평균인 91.81%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종사자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는 29개로 전체 사업체의 0.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표 2-18 |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추이 •

(단위 : 명)

구분	규모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계	3,874,156	3,950,169	4,019,872	4,103,172	4,176,549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9명	3,559,700	3,627,991	3,695,031	3,765,352	3,834,258
		91.89%	91.84%	91.92%	91.77%	91.81%
	10~19명	168,008	176,344	178,231	186,654	187,627
		4.34%	4.46%	4.43%	4.55%	4.49%

구분	규모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20~49명	96,868	96,370	97,545	100,961	102,986
		2.50%	2.44%	2.43%	2.46%	2.47%
	50~99명	31,126	30,808	30,284	31,235	32,315
		0.80%	0.78%	0.75%	0.76%	0.77%
	100~299명	14,656	14,710	14,758	14,907	15,232
		0.38%	0.37%	0.37%	0.36%	0.36%
	300~499명	1,967	2,050	2,093	2,092	2,102
		0.05%	0.05%	0.05%	0.05%	0.05%
	500~999명	1,195	1,270	1,257	1,275	1,310
		0.03%	0.03%	0.03%	0.03%	0.03%
	1,000명 이상	636	626	673	696	719
		0.02%	0.02%	0.02%	0.02%	0.02%
	계	278,850	283,554	286,571	288,860	290,357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부산	1~9명	258,180	262,055	265,221	266,789	268,300
		92.59%	92.42%	92.55%	92.36%	92.41%
	10~19명	11,040	11,768	11,668	12,189	12,117
		3.96%	4.15%	4.07%	4.22%	4.17%
	20~49명	6,244	6,301	6,278	6,441	6,460
		2.24%	2.22%	2.19%	2.23%	2.22%
	50~99명	2,174	2,204	2,161	2,218	2,247
		0.78%	0.78%	0.75%	0.77%	0.77%
	100~299명	973	977	1,004	988	984
		0.35%	0.34%	0.35%	0.34%	0.34%
	300~499명	131	147	126	121	126
		0.05%	0.05%	0.04%	0.04%	0.04%
	500~999명	81	75	85	85	94
		0.03%	0.03%	0.03%	0.03%	0.03%
1,000명 이상	27	27	28	29	29	
	0.01%	0.01%	0.01%	0.01%	0.01%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III

중앙정부 및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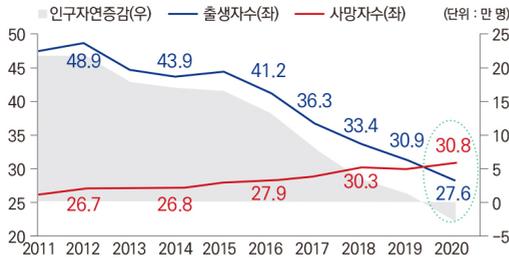
1. 중앙정부 인구정책

제3기 인구정책 TF 추진 개요

- 2021년 1월 정부는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상정·발표하였음⁵⁾
 - 제3기 인구정책 TF는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 등 3대 인구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선제 대응,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임
- 우리나라의 경우 출생아 수는 크게 감소한 반면, 고령인구 확대로 사망자 수는 증가하면서 2020년부터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었음
 - 이와 함께 생산연령인구의 감소폭 확대 등으로 인해 경제상황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1.1.27.,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 발표

• 그림 3-1 | 인구 자연증감(출생자수-사망자수) •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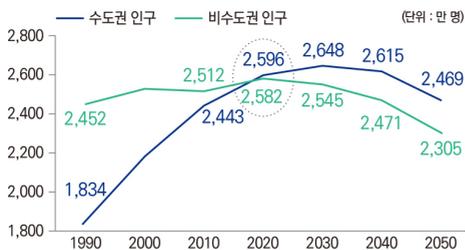
• 그림 3-2 | 잠재성장률 전망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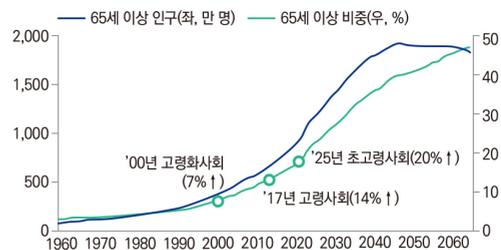
- 2020년에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은 인구집중 따른 혼잡비용 증가로 일자리·결혼·출산이 어려워지는 반면(6), 지방은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그리고 202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이 시작되면서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재정·의료 등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조정과 대응이 필요함

• 그림 3-3 | 수도권-비수도권 인구변화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 그림 3-4 | 우리나라 노인인구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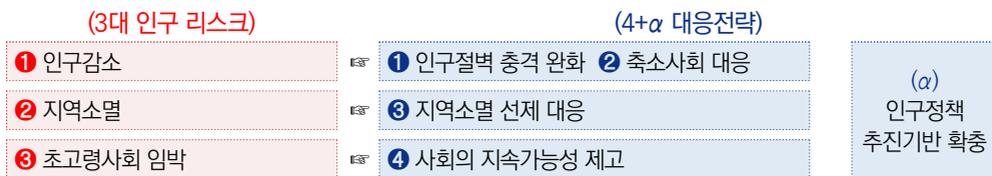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1.1.27.,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 발표”

제3기 인구정책 TF 추진계획

- 제3기 인구정책 TF 추진계획의 기본방향은 아래의 그림과 같음
 -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의 3대 인구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선제 대응,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인구정책 추진기반 확충이라는 '4+ α ' 전략을 제시하였음⁷⁾

• 그림 3-5 | 제3기 인구정책 TF 추진계획 •



자료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2021)

- 첫째, 인구절벽 충격 완화를 위해서 인구감소가 생산인력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다양한 고용형태에 맞는 시장환경을 조성하여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계획임
- 둘째, 축소사회 대응을 위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며, 1인 가구 및 법률혼 외 다양한 가정형태를 반영한 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임
- 셋째, 지역소멸 선제 대응을 위해 권역별 거점도시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인구 과소지역은 압축도시화를 추진할 계획임
- 넷째,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의료 및 돌봄 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할 계획임
- 마지막으로 인구정책 추진기반 확충을 위해 인구통계 관리 및 분석, 연구 기능을 강화하여 인구정책 수립을 지원할 계획임

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1.1.27.,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 발표

• 그림 3-6 | 제3기 인구정책 TF 추진과제 •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	
인구 감소	구조 변화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8%;"> <p style="text-align: center;">1. 인구절벽 충격 완화</p> </div> <div style="width: 48%;"> <p style="text-align: center;">3. 지역소멸 선제 대응</p> </div> </div>	
<p>여성 경력유지 및 단절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사업 개선방안 마련 • 양성평등 근로환경 조성 • 여성 노동시장 참여촉진 	<p>권역별 거점도시 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도시중심 발전전략 수립 • 지방이전 인센티브 강화
<p>베이비붐 세대 노동시장 이탈 감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시니어 창업 활성화 • (취업) 생애주기별 경력개발 내실화 및 노인일자리 개발 • 고령자 고용활성화 제도 검토 	<p>인구과소지역 압축도시화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기능 집약전략 수립 • 이용도 낮은 인프라 정비 및 주변부 난개발 방지
<p>외국인력 부족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노무업종 인력난 대응 • 우수인력 유치·정착 지원 	<p>혁신도시 발전기반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지역과의 상생기반 조성 • 혁신도시 민간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
<p>다양한 고용형태 확대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제도 기반 구축, 종사자 보호, 플랫폼 산업 활성화 등 	
<p>전국민 평생학습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각지대 해소 및 효과성 제고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8%;"> <p style="text-align: center;">2. 축소사회 대응</p> </div> <div style="width: 48%;"> <p style="text-align: center;">4.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p> </div> </div>	
<p>대학 경쟁력 강화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 사립대 역할분담 • 한계사학 관리방안 마련 • 대학 정원제도 합리화 등 	<p>재정의 지속가능성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성 및 수익성 제고 •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p>산업현장 숙련인력 감소 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별 부족인력 현황파악 및 대응방안 수립 • 숙련인력 암묵지 산업자산화 	<p>급증하는 고령층의 건강권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전달체계 정비 • (돌봄) 기술개발, 인력확충, 요양병원 감염관리 강화
<p>가족 다양화 및 구성원 수 감소 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혼 외 가족형태 반영 • 1인가구 맞춤형 지원 	
<p style="text-align: center;">5. 인구정책 추진기반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정책 수립 과정에서 통계청, 연구기관 등 역할 강화 	

자료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2021)

지역소멸 선제 대응 분야 추진과제

- 제3기 인구정책 TF는 2021년 7월에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에 대한 총론적 대응전략을 발표하였음(관계부처 합동, 2021)
 - 2021년 1월에 발표한 제3기 인구정책 TF 추진계획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형태의 대응전략임
 - 주요 대응전략으로는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선제 대응,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인구정책 추진기반 확충 등을 제시하였음
- 이 중에서 지역소멸 선제 대응 분야의 주요 추진과제는 거점 육성을 통한 광역권 형성과 소멸위기지역 자립역량 강화로 설정하였음
 -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춘 지방 거점도시를 육성하고, 초광역권계획 수립 및 행정통합 등을 통해 발전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함
 - 이와 함께 소멸위기 지역은 지역의 필요·선택에 따른 특화사업을 지원할 계획임
- 먼저 거점 육성을 통한 광역권 형성은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권계획 수립,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광역시 내 도심융합특구 조성 등의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음
 - 첫째, 2개 이상 광역자치단체 간 합의에 의한 공간구상 및 협력사항 등을 포함하는 초광역권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둘째,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등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차원의 행정통합 논의 지원 등을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검토할 계획임
 - 셋째, 광역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기능이 복합된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여 광역권 내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임(5개 광역시 중에 대구·광주·대전은 사업지구 선정 완료, 부산·울산은 선정 협의 중임)
- 그리고 소멸위기지역 자립역량 강화는 생활권 단위 연계·협력 활성화, 농촌공간계획 수립, 지역특화사업 및 농촌협약 추진 등의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음
 - 첫째, 생활인프라 공동이용 등 생활권 단위 연계·협력 활성화 및 지방소멸 위기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시책·제도 특례를 발굴할 계획임(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지원, 중소기업 지방세제 감면, 초중고등학교 통합 운영 등)

- 둘째, 농산어촌 지역 생활거점 구축을 위한 주거플랫폼 사업 추진 및 노후주택 정비와 축사·공장 난립해소를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 셋째, 지역의 필요·선택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특화 사업 및 농촌협약을 추진할 계획임

2.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인구정책 추진 개요

- 부산광역시는 인구 변화와 특성을 재진단하고 각 부서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어오던 기존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2020년에 「부산 인구활력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음
 - 복합적이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인구증대에 초점을 맞춘 단편적인 출산정책은 한계가 있음
 - 특히 부산은 청년층과 인재유출 및 저출산 등으로 인해 인구활력이 감소되고, 이로 인해 도시활력 저하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또한 장기간 인구감소에 따른 유소년 및 학령인구 감소, 고령층 및 1인 가구 증가 등의 인구구조 변화는 새로운 도시발전 전략을 요구하고 있음
- 인구활력 추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존 인구정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저출산 대응 보건사회정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구정책이 부서별로 연계성 없이 추진되어 왔음
 - 인구(특히 청년층)의 사회적 유입·유출에 대한 다각적 접근이 부재하였음
 - 인구성장을 전제로 양적 성장과 인프라·확장형 정책에만 중점을 두고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과 생애주기 균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음

- 인구활력 추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재정립 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일자리혁신, 대학·인재육성, 가족친화환경 조성 등 청년층의 지역 유입과 정책을 유도하는 ‘인투(into) 부산’ 정책을 통해 활력있는 인구구조를 형성할 계획임
 - 초고령사회 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세대·계층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과 시민 생활패턴에 기반한 도시정책 추진 등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할 계획임
 - 복합사무인 인구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운영하고,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균형발전 광역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부산 인구활력 추진계획

- 부산광역시는 ‘새로운 인구활력, 새로운 도시활력, 모든 세대가 행복한 부산’을 인구정책의 추진목표로 설정하였음⁸⁾
 - 이러한 정책목표 하에 ‘활력있는 인구구조 형성’, ‘인구변화 적응력 강화’, ‘인구정책 추진체계 정립’이라는 3가지 정책방향을 수립하였음
 - 3가지 정책방향은 각각 3개의 추진전략을 포함하고 있음
- 첫째, ‘활력있는 인구구조 형성’을 위한 전략으로 ① 일하기 좋은 도시 조성, ② 미래인재 선도도시 구현, ③ 아이함께 행복도시 조성을 제시하였음
- 둘째, ‘인구변화 적응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① 활기찬 초고령 사회구현, ② 생애주기 균형정책 추진, ③ 라이프스타일 도시구현을 제시하였음
- 셋째, ‘인구정책 추진체계 정립’을 위한 전략으로 ①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② 범지역 광역협력 체계형성, ③ 인구정책 상시발굴 체계 마련을 제시하였음

8) 부산시 보도자료, 2020.6.2., “부산시, 시민 중심의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본격 가동”

• 그림 3-7 |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추진목표 및 과제 •

새로운 인구활력, 새로운 도시활력, 모든 세대가 행복한 부산	
정책방향	전략 및 과제
활력있는 인구구조 형성	일하기 좋은 도시조성
	① 청년 선호 일자리 확대 ② 전략산업 고용·창업 확대
	③ 지역기업 고용의 질 개선 ④ 안정적인 여성일자리 확대
	미래인재 선도도시 구현
	① 글로벌 대학도시 조성 ② 지역혁신 인재 육성
	③ 우수 고교인재 확보·육성 ④ 국내외 우수인재 유입
	아이함께 행복도시 조성
	① 신혼부부 주거복지망 확충 ②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
	③ 부모안심 보육환경 조성 ④ 아동친화 도시정책 확대
	인구변화 적응력 강화
① 장노년 경제활력 증진 ② 고령친화 헬스산업 육성	
③ 고령자 맞춤형 주거정책 추진 ④ 아동친화 도시정책 확대	
생애주기 균형정책 추진	
① 정책사각 생애주기 지원 강화 ② 생애주기별 통합서비스 플랫폼	
③ 생애주기별 능력개발체계 구축 ④ 유희시설 생애주기 균형거점 조성	
라이프스타일 도시구현	
① 일·생활 균형문화 조성 ② 1인가구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③ 창의적인 도심 혁신허브 조성 ④ 질적성장 기반 도시정책 전환	
인구정책 추진체계 정립	
	① 인구정책위원회 ② 인구정책기본계획 ③ 인구영향 분석제도
	범지역 광역협력 체계형성
	① 인구활력추진단 ② 동남권 인구협의체 ③ 국가균형발전
	인구정책 상시발굴 체계마련
	① 연구기관 협력 ② 인구정책 플랫폼 ③ 시민공감토론회

자료 : 부산광역시(2020). 부산 인구활력 추진계획

기업 유치 관련 지원 정책

- 부산광역시는 우수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진흥기금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제17조에 근거하여 최대 300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및 설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지원대상은 역내이전, 신·증설, 국내복귀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컨택센터 등임
- 투자진흥기금 관련 보조금의 구체적인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음
 -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이 포함된 경우 이거나 시역 내 투자사업장을 매입·인수·합병하여 단순히 소유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법인기업 중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10억 원 이상 투자한 기업(단, 대기업은 300억 원, 지식서비스산업은 5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신규법인은 모기업이 50% 이상 출자 시 모기업 업종과 업력을 인정함
 - 투자사업장이 투자기업의 소유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모기업이 소유한 부지는 인정함
 - 신·증설 투자는 기존사업장을 유지해야 하며, 역내이전 투자는 기존사업장을 매각 또는 폐쇄해야 함
 - 그리고 역내이전 투자는 독립된 사업장(필지 또는 지번 분리)이어야 함
-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재정, 세제, 행정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토지매입비, 건물임대료, 설비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과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표 3-1 | 부산시 투자진흥기금 지원제도 •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유형	
		입지보조금(지원비율)	설비보조금(지원비율)
대규모 투자 ①	• 투자금액 2,000억 원 이상 또는 투자사업장 상시고용 1,000명 이상	-	• 300억 원 이내 (설비투자비의 14% 이내) * 고용보조 최고 5%
국내복귀 기업	•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국내복귀기업	-	• 상기 설비보조금 한도 내에서 해외설비이전비 50억 원 이내 지원
대규모 투자 ②	• 투자금액 500억 원 이상 • 또는 투자사업장 상시고용 300명 이상 ※ 입지 또는 설비 중 선택 지원	• 100억 원 이내 (부지매입비의 30% 이내)	• 100억 원 이내 (설비투자비의 14% 이내) * 고용보조 최고 5%
역내 이전기업	• 상시고용 30명 이상 ※ 입지+설비 중복 지원	• 20억 원 이내 (부지매입비의 30% 이내)	• 20억 원 이내 (설비투자비의 14% 이내) * 고용보조 최고 5%
신·증설 기업	• 기존 상시고용 20명 이상 투자사업장 신규고용 20명 이상	-	• 30억 원 이내 (설비투자비의 14% 이내) * 고용보조 최고 5%
지식서비스 산업	• 기존 상시고용 10명 이상 투자사업장 신규고용 10명 이상	• 2억 원 이내 (건물매입가액의 15% 또는 1년분 건물임차료의 50% 이내)	• 3억 원 이내 (설비투자비의 30% 이내) * 고용보조 15억 한도 (15명 초과 시 1인당 250만 원, R&D 인력은 10명 초과 시 1인당 500만 원)
컨택센터	• 기존 상시고용 20명 이상 투자사업장 신규고용 10명 이상	• 4억 원 이내 (건물매입가액의 15% 또는 1년분 건물임차료의 50% 이내)	• 6억 원 이내 (설비투자비의 30% 이내) * 고용보조 한도 없음 (50명 초과 시 1인당 200만 원)

자료 : 부산광역시(2021).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투자 지원제도

IV

일자리 관련 인구정책 및 사회적 인구증가 사례

1. 국내 인구정책 사례

서울특별시 '스페이스 살림' 사업

- 이 사업은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일과 돌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임
 - 아동동반 공유사무실과 영유아 돌봄교실 및 거점형 키움센터(우리동네 키움센터) 등의 공간이 구성되어 있어, 아이들과 함께 출근할 수 있음
- 스페이스 살림은 성평등 희망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임
- 스페이스 살림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운영됨
 - 대상 : 서울시민, 서울시에 재직/재학하는 자, 또는 거주중인 재외동포 및 외국인 등록자를 대상으로 함
 - 지원 및 이용료 : 멤버십 형태로 운영되며, 월 33,000원(아동 동반 공유사무실), 시간당 3,300원(영유아돌봄센터)을 지원함
- 부산광역시에는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직장 내 보육시설 확충' 등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음
 - 다만, 서울의 스페이스 살림은 공유사무실과 보육시설(영유아 돌봄교실, 거점형 키움센터)을 결합하여 직장인이 아닌 프리랜서 등의 공유사무실 이용자를 위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강원도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사업

- 이 사업은 신규 정규직원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인건비 및 용자를 지원하는 사업임
- 강원도는 코로나19로 침체한 경기 활성화를 위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1년 3월부터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2종 세트를 추진하고 있음
 - 총사업비 3,888억 원을 투입하여, 6,50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2021년 4월에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하였음)
- 취직지원(2021~2022년), 기업성장(2021~2023년), 고용유지(2024년) 정책 추진 시 기업에게 정규직원 1인당 최대 5천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임⁹⁾
 - 1단계(취직지원) : 신규 정규직원 채용 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0만 원의 인건비를 1년간 1만 명에게 지원할 계획임
 - 2단계(기업성장) : 정규직원 1명을 채용할 때마다 3천만 원씩,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용자를 지원하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천억 원 규모의 고용 창출·유지자금을 조성하여 지원할 계획임
 - 3단계(고용유지) : 3년간 고용 유지 시 용자금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지원할 계획임
- 부산광역시는 '부산 청년 파란일자리 사업 확대', '중소기업 지역인재 고용 초기 임금 지원' 등의 일자리 정책을 계획하고 있음
 - 다만, 강원도의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사업은 인건비 지원뿐만 아니라 일자리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로 용자 지원을 연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경기도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 사업

- 이 사업은 대학생에게 훈련비와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관·산·학 협력 사업임

9) 한국경제신문, 2021.3.25., "강원도, 정규직 1명 뽑아 '3년 유지하면 기업에 5천 100만 원' 준다"

- 도내 대학에서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여 대학생의 취업률 제고와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¹⁰⁾ 경기도, 경기도 내 대학 및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임
 - 경기도는 기본계획 수립, 대학 선정 및 협약, 대학-기업 매칭 지원, 사업비 지원 등을 담당함
 - 경기도 내 대학은 전공 관련 기업과의 협약, 학생모집, 과정 운영, 사업비 분담 등을 담당함
 - 기업은 학생선발, 실습 및 의무복무 지원(업무부여, 근무 경력인정 등), 사업종료 후 수료자 채용 결정, 사업비 분담 등을 담당함
- 참여 학생 규모는 과정당 30명(졸업예정자 70% 이상 포함)이며, 선발된 학생은 6개월의 전공과정 수업을 들은 후 6개월 이상을 기업체에서 의무 복무해야 함
 - 참여 학생에게는 교육과정 중 월 30만 원의 교육훈련비가, 의무복무 중 월 165만 원의 교육훈련비가 지원됨
 - 단, 중도 탈락생이 발생할 경우 과정 운영 또는 의무복무 포기일자 기준으로 교육 훈련비를 일할계산하여 포기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함
- 경기도와 참여대학이 7:3의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하며, 2017년 기준 총사업비 규모는 860백만 원임

• 표 4-1 |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사업 사업비 산출기초 •

주체	세부내용
도(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비 : 540백만 원(30만 원×150명×12월) • 과정운영비 : 60백만 원(도비의 10% = 12,000천 원×5개교)
참여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비 : 52백만 원(협약기업의 현금 및 현물 출연 포함)
참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비 : 135만 원(1인당)

주 : 1) 기업부담의 교육훈련비 135만 원은 2017년 고용노동부 고시 월 최저임금임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소기업이 의무복무 2명 이상 배치 시, 참여 학생 동의를 전제로 도비 포함 1,352,230원 지원 가능

10) <https://blog.naver.com/victoryinsun/220662962657>, “2016년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사업자 공모”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개 대학 재학생 190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80.5%인 153명 (해당 업체 118명, 다른 업체 35명)이 취업함
- 부산광역시는 이 사업과 비슷한 ‘지역 우수인재(대학생)와 지역 강소기업 취업 연계’ 사업이 있음
 - 해당 사업도 대학생이 졸업 후 강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관·산·학 협력 사업임
 - 강소기업은 재학 중 장학금 및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과 부산광역시는 우수 인재 선발, 장학금 지급, 인턴 사업, 취업 연계 등의 업무지원을 담당함
 - 다만, 경기의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은 대학생들이 전공과정 수업(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의무복무를 하는 방식으로 계획되었으며, 교육훈련 및 의무복무 기간 동안 훈련비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대전광역시 ‘일취월장 123 청년 인력양성’ 사업

- 이 사업은 미취업자 청년에게 직업훈련 교육과 훈련비/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임
-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역 청년이 취업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단계별 체계적 지원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임
 - 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고졸자는 만 15세 이상)를 대상으로 함
 - 훈련과정 : 직업훈련상담 및 맞춤형 전문교육(1단계) → 취업알선과 인턴 및 정규직 전환지원(2단계) → 사후지원 및 관리(3단계)로 구성됨
 - 지원 : 월 1인당 훈련비 80만 원 내외, 훈련수당 30만 원, 인턴 및 정규직 전환 시 각각 3개월간 월 80만 원씩 지원함

대구광역시 ‘기업인턴’ 사업

- 이 사업은 미취업자 청년에게는 장려금을, 인력 채용 기업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취업난에 시달리는 지역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력개발을 지원하며, 지역 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공급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임(박승규·박진경, 2017)
 - 대상 : 대구광역시 거주 만 15~39세 이하 미취업자, 대구시 소재 고용보험 가입 종업원 수·상시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함
 - 임금 지원 : 3개월간 90만 원(최대 270만 원)을 지원함
 - 정규직 전환 : 2개월간 100만 원(최대 200만 원)을 지원함
 - 취업장려금 : 정규직 전환 6개월 후 전환 인턴에게 100만 원을 지원함
- 부산광역시는 ‘부산 청년 파란일자리 사업 확대’, ‘중소기업 지역인재 고용 초기 임금 지원’ 등의 일자리 정책을 계획하고 있음
 - 다만, 대구의 ‘기업인턴’ 사업은 정규직 전환 시 인건비 및 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대전광역시 ‘맞춤형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사업

- 이 사업은 스타트업에게 창업지원(자금, 교육 및 멘토링, 생산 관련)을 해주는 사업임
- 창업 초기 기업들에게 체계적인 창업지원을 통한 창업생태계 구축,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임(박승규·박진경, 2017)
 - 대상 : 대학생, 청년 등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함
 - 지원 : 초기 창업활동에 필요한 창업자금 지원, 창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 교육프로그램, 전문 멘토링, 창업 후 성장을 위한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발 등 후속 지원 등을 제공함

- 부산광역시는도 ‘청년 복합타운 조성-청춘 지식공유 플랫폼’, ‘부산 청년 소셜벤처 허브 조성’ 등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 다만, 대전의 ‘맞춤형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사업은 발굴, 자금 및 멘토링 지원, 후속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서울특별시 ‘창조전문인력양성’ 사업

- 서울에 집적된 우수 기관과 인력을 활용하여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갈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 분야의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대학생 이상의 취업 대상자를 지원하는 사업임(박승규·박진경, 2017)
 - 서울크리에이티브랩 : 창조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허브 및 프로그램 인큐베이션을 담당함
 - 창조아카데미 운영 : 대학에 서울의 특화산업 및 유망산업계의 인력 수요를 최우선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 산업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함
 - 캠퍼스 CEO 육성 : 대학에 창업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기업가정신 고취 및 창업역량을 강화함
 - 미래형 신직업군 창출 : 미래사회변화 요구에 대응하는 유망직업을 발굴함
 - 서울커뮤니티크리에이터 양성 : 창의적 관점에서 도시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함

제주특별자치도 ‘생산연령인구 확충’ 사업

- 이 사업은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주도의 인구정책사업 중 하나임¹¹⁾
-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출산·고령화, 유입인구 감소 등 인구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음
 - 생산연령인구 확충사업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비하기 위해 청년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을 확대·발굴하려는 사업임

11) 제주도민일보, 2020.3.30., “제주, 둘째아 이상 ‘5년간 1,000만 원’ 지원”

- 세부 사업으로는 청년 주거비 소득계층별 맞춤형 지원, 생산가능인구(청년·중장년) 취·창업 지원, 국내외 기업 유치 및 도내 기업의 규모화를 통한 일자리 확충, 제주형 글로벌 청년 인재 양성, 생산가능인구 기준 연령 상향(만 64세 → 만 69세), 60+ 실버뱅크 운영 등이 있음
- 청년층의 취·창업과 관련해서는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 제주의 더 큰 내일센터는 선 지원, 후 숙련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청년 취·창업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향토기업 및 지역사회 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전문적 인력양성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특히 더 큰 내일센터는 선발자의 25% 이내에서 도외 청년을 선정함으로써 도외 지역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음
-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의 도외 청년 참여기준을 완화하였음(홍근석·김봉균, 2020)
 - 지원대상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고용하면서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는 기업임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고, 월 급여(주거지원비 제외) 280만 원 미만인 자(단, 도외 지역 출신의 경우는 ‘3개월 이상 정규직 근무 조건’을 없애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신청 자격을 부여함)가 신청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도외 청년의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안정적 주거 정착을 지원함

• 표 4-2 | 제주특별자치도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한 세부 사업 •

사업명	연도별 투입예산				
	2020	2021	2022	2023	2024
1.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5,850	6,000	6,000	6,000	6,000
2. 청년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300	300	300	300	300
3.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지원 사업	3,500	3,500	3,500	3,500	3,500
4. 생산연령인구 기준연령 상향(만 64세 → 69세)	-	-	-	-	-
5. 정년 없는 일자리 창출, 60+ 실버뱅크 구축	-	-	-	-	-
합계	9,650	9,800	9,800	9,800	9,80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20).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시행계획」

제주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는 조례를 통해 기업에게 도세를 감면해주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별 위임에 따른 감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 기본 감면 이외에도 조례를 통해서 도세를 개별 감면할 수 있음

• 표 4-3 | 제주특별자치도 개별감면 현황 •

구분	대상	감면 혜택
법인의 이전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 과일역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제주도로 본점 등을 이전한 6개월 이상 사업한 기업	• 부동산 취득세 면제, 법인등기 및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최초 5년간 재산세 면제, 다음 3년간 50% 경감
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경감	• 3년 이내 1년이라도 100만 불 이상 수출실적을 달성한 제주도에 본점을 둔 기업	•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년간 50% 경감
해운산업 육성을 위한 감면	•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 제주선박등록특구의 선적항 등록 조건부 선박 • 제주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된 선박	• 취득·대여 선박에 대하여 취득세 2% 경감, 재산세 감면 •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면제	• 제주공항을 출발 또는 도착점으로 평균 주2회 이상 운행하는 운행사 • 제주국제컨벤션 센터	•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면제 • 부동산 취득세 면제
녹색성장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지능형전력망 실증단지 내 홍보용 건축물	• 재산세 면제
고용창출 촉진을 위한 감면	• 제주도지사 인증 고용우수기업	• 부동산 및 기계장비, 3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한 취득세 면제(2016년 12월 31일) •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경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감면	• 201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제주도내 본점/지점이 있으며, 2018년 7월 13일 이후 종업원 수가 증가하는 내·외국법인	• 3년간 지방세 경감, 주민세 전액면제, 자동차세는 추가근로 인원에 따라 자동차 연세액의 50% 경감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강원도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 강원도의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원랜드, 한국광해관리공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이 협업해 혁신성장 가능성이 큰 청년 창업기업을 유치하고 유망기업을 육성해 폐광지역의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등 폐광지역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기 위한 프로젝트임¹²⁾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또는 졸업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만 참여할 수 있음
 - 최종 선정 기업은 1년 이내에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강원 남부 폐광지역(태백시/삼척시/영월군/정선군 중 1곳)으로 이전 또는 신설해야 하며, 5년 이상 유지해야 함
- 선발규모는 넥스트 유니콘 3개 기업과 특별선발(지자체 연계) 최대 3개 기업으로 구분되며, 선발 분야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강원랜드 : 기업당 최대 10억 원(3개사)
 - 한국광해관리공단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른 대체 산업용자지원 우대, 강원권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연계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정책자금 투·융자 연계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성과공유제, 협력이익공유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등 상생프로그램 연계 및 사후관리
 - 지방자치단체 : 이전 가능 공간 유무상 제공, 보조금/세제 지원, 융자지원, 근로자 숙소 임차보증금 지원, 물류비 지원 등으로 세부 내용은 각 지자체별, 이전 예상 지역별 및 기업별 상이

12) 문화일보, 2020.12.23.,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에 (주)블루모션테크 등 3개 업체 최종 선발”

• 표 4-4 |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주요 내용 •

분야	기업 수	지원 내용				VC투자
		강원랜드 지원금	지자체 혜택*	중진공 투·융자	광해관리공단 융자	
넥스트 유니콘	3개 기업	●	●	●	▲	선정 대상
특별선발* (지자체 연계)	최대 3개 기업	- (지자체 지원금)	▲	▲	▲	

주 : 지자체 혜택 중 폐광지역 진흥지구와 그 외 지역의 지원 항목과 규모가 다름

- 현재 총 6개의 기업이 넥스트 유니콘으로 선발되었으며, 2019년 선발된 기업 중 2곳은 태백, 1곳은 영월로 본사/연구소를 이전 및 신설하였음

• 표 4-5 |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선발기업 현황 •

연도	경쟁률	선발기업	주요 사업	지역
2019	41.6대1	아티스앤오션	• 스쿠버다이빙용 올인원 스마트 디바이스 생산	태백
		(주)넥스트온	• 미래형 도시농업 인도어팜 식물공장	태백
		(주)제우기술	• 리니어모터를 활용한 포터블 혈액투석기, 치아가공기, 세포배양기 등의 의료분야 장비	영월
2020	27대1	(주)블루모션테크	• 초정밀 스테이지 개발	-
		동남메가텍	• 정보기술(IT)제품용 인쇄회로기판 제조	-
		(주)진스랩	• 유전자 진단 및 진단키트	-

2. 국외 인구정책 사례

미국 뉴욕주의 ‘START-UP NY’ 프로그램

- 이 프로그램은 면세구역에 입주한 기업(개인)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 START-UP NY(SUNY Tax-free Areas to Revitalize and Transform Upstate New York) 프로그램은 기업을 유치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대학 주변에 면세구역(Tax-free)을 설치하고, 해당 구역에 입주한 기업에게 소득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일종의 관·산·학 협력 프로그램임

- 2014년 1월 뉴욕 전역에서 시행되었으며, 2021년 3월 기준으로 뉴욕주립대학을 포함한 총 80개의 대학이 참여하고 있음
- 면세구역에 입주한 기업은 10년 동안 거의 모든 주정부 세금 부담이 면제되며, 구체적인 세제 혜택 및 조건은 다음과 같음

• 표 4-6 | START-UP NY 프로그램 세제 혜택 및 지원조건 •

세제혜택	비고
Tax elimination credit (세금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첫 5년간은 전액, 두 번째 5년간은 20만 달러의 소득까지 면제 • (기업) 면세구역 안의 사업활동으로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한 세액분만 면제
주 부동산 거래세 면제	• 면세구역 내 다른 입주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세액에 한정
주 판매세와 사용세 전액 세액공제	• 면세지역에서 사업시작 후 120개월 동안 사업 중 발생한 기업의 소비 활동에 한정
정보통신 특별소비세 세액공제	-
광역통근세 면제(MCTMT)	-
organization tax and license and maintenance fees exemption (법인세, 면허 및 유지비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기업 : organization tax(법인세) 면제 • 외국기업 : License and maintenance fee(면허 및 유지비) 면제

자료 : 1) 뉴욕주 홈페이지
2) 하능식 외 3명(2019), 「지방소득세 자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해외사례 연구」

- 단, 면세구역에 입주하려면, 지원서 제출과 주정부의 승인이 필요함
 - 신규 기업이거나 면세구역 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다른 주에서 사업장을 옮겨오는 기업입
 - 뉴욕 내 대학과의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함
 -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지역사회에 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해야 함
 - 도·소매업, 식당, 법무 및 회계법인, 부동산업, 호텔 및 요식업, 은행, 금융 및 금융 서비스, 개인 서비스 제공 기업, 기업 행정지원 및 서비스 제공 기업, 의료·치과 진료, 유틸리티 및 에너지 생산 등 일부 사업업종 기업은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됨
- 2019년 10월 31일 기준, 총 303개의 기업이 START-UP NY 프로그램 참여를 승인 받았으며, 총 5,332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275백만 달러의 투자가 진행됨

- 부산광역시는도 ‘산학연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 대학의 유휴시설을 기술창업 생태계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있음
 - 다만, 뉴욕주의 프로그램은 면세구역에 입주한 기업과 개인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 하고 있으며, 참여업종 제한이나 뉴욕 내 대학과의 파트너 협약 필수 등 입주기업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미국 텍사스주 인센티브 프로그램

- 이 프로그램은 투자기업에게는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해당 기업 직원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 미국 텍사스주는 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요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는 법인세/개인소득세 면제, 텍사스산업펀드(Texas Enterprise Fund), 재산세 감면 정책(챕터 380/381, 313) 등이 있음

• 표 4-7 | 텍사스 인센티브 프로그램 •

구분	프로그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법인세율 및 주 개인소득세율 0%
지역별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eeport Exemption(수출용 단기 재고자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 Economic Development Act(Chapter 313)(경제개발법 제313조) • 세금공제(10년 내에서 부동산 및 재산증가분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면제) • Local Government Code Chapter 380/381(지방자치법 제380/38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ype A and B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s(판매세를 통한 프로젝트 지원) • Texas Enterprise Fund(TEF, 텍사스 산업펀드) • Manufacturing Exemptions(제조 및 가공하는 납세자에 대한 판매세 면제) • 천연가스/전기에 대한 주 판매 및 사용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센터 인센티브 • 연구개발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ills Development Fund(맞춤형 직업 교육 지원 보조금) • Governor’s University Research Initiative(연구원에 대한 보조금) • Texas Product Development and Small Business Incubator Fund(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리볼빙 대출 프로그램)

자료 : KOTRA(2019). 빠르게 성장하는 텍사스, 델러스를 주목하라 요약.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72245>

- 텍사스 산업 펀드(Texas Enterprise Fund, TEF)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텍사스주에서 진행되는 일자리 창출과 자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주지사, 부지사, 하원의장의 동의하에 19만 4천~5천만 달러의 현금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 TEF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이 있음
 - ◆ 최소 75개의 풀타임(도심) 혹은 25개의 풀타임(외곽)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
 - ◆ 신규 일자리의 임금은 최소 카운티의 평균임금과 같거나 많아야 함
 - ◆ 상당한 규모의 계획적인 자본투자를 해야 함
 - 2004년 시작되어 2020년 12월 31일까지, 181개의 프로젝트에 678백만 달러 규모의 TEF가 지원되었음
 - ◆ 총 104,331개의 신규 일자리, 34백만 달러 규모의 자본투자, 총 104,331개의 신규 일자리가 약속되었음
 - ◆ 신규 일자리의 중위 임금은 52,499달러임

- Texas Economic Development Act(Tex Code Chapter 313)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정 대기업이 텍사스 지역 공립학교의 재산세를 목적으로 재산에 대한 감정가를 제한할 수 있는 주정부 세금 인센티브 프로그램임
 - ◆ 2001년 처음 도입되어 현재 2022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이며, 현재 해당 기간을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법안이 제출됨
 - 텍사스주 내 각 교육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고임금·정규직 일자리와 투자를 지속하는 기업에 대해서 최대 10년간 부동산 및 기계설비 등 각종 재산 증가분에 대한 세금을 감면할 수 있음¹³⁾
 - ◆ 감정가가 제한된 재산의 제한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제한금액은 법령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 학군별로 10백만 달러에서 100백만 달러까지 다양함

13) 김국현, 2021.4.21., “[이슈분석] 미국조지아 텍사스 테네시 주 등 한국기업 투자 몰린다...어떤 혜택 주길래?”, 녹색경제신문

- ◆ 10년간의 세제혜택 기간 동안 예상되는 학교 세입 감소분은 공립학교 재정 제도를 통해 국비로 상당 부분 대체됨
- 챗터 313 대상 업종은 제조업, 연구개발, 청정 석탄 및 에너지 프로젝트, 재생전기 발전, 원자력, 컴퓨터 데이터 센터,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약속한 프로젝트로 제한됨
- 챗터 313에 의거하여 지원받은 대표적인 기업은 테슬라로, 약 10억 달러(약 1조 2,100억 원)의 투자 및 최소 5,000명 고용조건으로 오스틴시 델발리 교육자치구로부터 10년간 1,470만 달러(약 176억 원) 세금 감면을 협약함
 - ◆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19조 원 규모의 반도체 신공장 구축에 대한 세금 감면 논의 또한 챗터 313에 의거한 인센티브임¹⁴⁾
- Local Government Code Chapter 380/381(지방자치법 제380/381조)¹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투자 시 기업에게 지원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Chapter 380은 Municipality(지자체), Chapter 381은 County(자치주)의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근거법임
 - ◆ 인센티브의 종류는 용자, 보조금 지원 또는 세금 감면 등이 있으며, 지역 경제 발전에는 신규 일자리 창출, 공장 설립, 설비 투자 등이 포함됨
 - 인센티브 제공 여부와 지원 규모는 전적으로 해당 지자체와 자치주의 재량임
 - ◆ 구체적인 투자 내용과 조건 및 인센티브 규모는 기업과 지자체(자치구)가 협의 후 계약서에 명시함

14) 매일경제(2021.03) [단독]美텍사스, 삼성 반도체 "'15년' 세금감면 타당하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1/03/274743/>

15) <https://comptroller.texas.gov/economy/local/ch380-381/>

미국 오바마정부의 ‘TechHire Initiative’

- 이 이니셔티브는 시민에게 IT 부문의 기술훈련을 제공하는 백악관 차원의 관·산·학 협력 이니셔티브임
- TechHire Initiative는 민간기업, 학교, 정부 등 여러 부문이 협력해 국민들에게 IT 분야의 컴퓨터 프로그램 코딩 훈련 등을 제공함으로써 IT 기술자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오바마 정부의 프로젝트임(한주희, 2015)
 - 기업(고용주) : 교육훈련 프로그램 이수자 채용, 필요한 인력 및 기술 등을 공유함
 - 교육기관 : IT 기술에 대한 일자리/실무 중심의 교육훈련을 제공함
 - 지방정부 : 교육기관과 기업 간의 원활한 소통 및 지역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조 체제를 마련함
 - 연방정부 : 보조금을 지원함
- TechHire Initiative를 통해 12개 지역에 12만 개 이상의 기술직 일자리가 창출되었음
 - 2015년 8월 10개 커뮤니티로 시작했던 것이 2018년 현재 72개 커뮤니티, 237개의 교육프로그램 제공자, 1,300명의 고용파트너가 참여하고 있으며, 4천 개 이상의 직업소개가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성장하였음(박진경·김상민, 2018)

일본의 원격근무 정책

-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쿄에 있는 회사에 다니면서 재택근무 방식으로 지방으로 이주한 사람들에게 각각 최대 100만 엔(1,100만 원), 160만 엔(1,6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함
 - 이바라키현 히타치시는 타 지역에 있는 기업에 다니지만 재택근무로 히타치시로 이사 온 만 39세 이하 성인에게 최대 151만 엔(1,600만 원)을 지원함
 - 단, 3년 안에 이사 시 지원금 전액, 3~5년 사이는 50%를 반환해야 함
- 위성사무실은 본사 기능을 분산시킨 사무실로, 주로 지방에서 운영되며 본사와 공유 오피스의 성격이 혼합된 원격근무 형태의 일종임(홍근석·김봉균, 2020)

- 지방의 지역자산과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본사에서 임대사무실 형태로 활용함
- 도쿠시마현은 일본에서 위성사무실 사업이 가장 활성화된 곳으로, 미요시시, 미마시, 가미야마정 미나미정 등 지역 전반에 걸쳐 현재 약 65개 기업이 위성사무실을 운영 중임
- 도쿠시마현은 크리에이티브 및 SOHO사업 도입 촉진 정비 사업 보조금, 정보통신 관련사업 입지 촉진 보조금 등을 통해 위성사무실을 개설하는 사업자를 지원하며, 위성사무실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오피스와 숙박시설에 대한 체험 서비스 기회를 제공함
- 위케이션은 원격근무를 활용해 주 근무지가 아닌 곳에서 일을 하면서 휴가도 즐기는 프로그램임
 - 근로자의 여가생활 보장 및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하는 한편, 지역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임
 - 또한, 위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관계인구를 늘려, 이들이 향후 관광이나 고향납세 제도를 통해 해당 지역에 기여하게 만드는 것이 취지 중 하나임
 - 2019년 7월 ‘위케이션 지자체 협의회’를 설립하고, 위케이션의 전국단위 확산을 위한 사례 및 정보 공유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와카야마현, 나가노현, 아키타현 유자와시, 시즈오카현 시모다시, 와카야마현 다나베시, 와카야마현 시라하마정, 와카야마현 구시모토정,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정 등이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음

스웨덴 J&D 프로그램

- J&D 프로그램은 ‘구직자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면 정부가 취업을 보장하겠다’는 상호의무(mutual obligation)에 입각한 프로그램임(박승규·박진경, 2017)
 - 구직자가 공공고용사무소나 민간고용서비스기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으면서 취업을 위해 노력을 하면, 고용서비스기관이 취업을 보장한다고 약속하고 구직자를 지원하는 맞춤형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임

- J&D 프로그램은 1단계(150일), 2단계(300일), 3단계(최대 2년)로 구성됨
- J&D 프로그램은 ① 실업급여를 소진할 때까지 취업하지 못한 구직자, ②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고 75일 이상 단시간 근로를 한 부모 구직자, ③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고 8개월 이상 계속해서 실업 상태에 있는 장기구직자, ④ Youth Job Programme에 15개월 이상 참가하고도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 실업자, ⑤ 출소자, ⑥ 질병이 있으면서 최대 550일의 질병 급여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 자 등과 같은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함

핀란드의 '고용서비스센터 네트워크, LAFOS'

- 핀란드의 LAFOS는 장기실업자들 중에서도 특히 복합적인 고용문제로 인해 노동 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자들의 노동시장 진입과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고용서비스센터 네트워크 조직임
 - 고용경제개발사무소와 지자체가 선별하여 위탁한 자들이 LAFOS의 고객임
- 2010년 기준 핀란드의 LAFOS는 39개, 고용 및 경제개발사무소 40개, 138개 지자체가 참여하며, 구조적 실업이 심각한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함(박승규·박진경, 2017)
- LAFOS는 개별 고객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진단, 재활 및 지도, 훈련 및 고용 과정을 제공함(박승규·박진경, 2017)
 - 진단 : 서비스 욕구의 진단, 의료·재활 욕구 조사, 개별 고용 및 활성화 계획의 개발 등을 제공함
 - 재활 및 지도 : 재활 활동, 지도 및 지원 등을 제공함
 - 훈련 및 고용: 고용보조금, 훈련생 등 고용 조치, 훈련 활동, 기타 적극적 고용 조치 등을 제공함

• 표 4-8 | LAFOS 협력기관과 서비스의 범위 •

구분	역할과 서비스 내용
고용경제개발사무소 (P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중개 및 취업알선 서비스 • 경력개발 지도 및 지원 • 경력상담 및 노동시장 정보 제공 • 노동시장훈련 • 고용보조금과 훈련생 제도 시행 • 기술과 근로능력 구축 • 의료 상담
지자체 (사회복지 및 보건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의 보건의료서비스 • 사회복지사의 서비스 • 지자체의 소득보조
사회보험기관 (Kel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시장보조급여, 기초실업수당, 훈련 보조금 • 의료, 지출비용 환불, 질병수당 • 개인과 집단 재활, 재활수당 • 은퇴급여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13). 취업취약계층 노동시장정책 효율화 방안 연구

유럽의 육아연계형 공유오피스

- 육아연계형 공유오피스는 공유오피스와 보육시설을 갖추어 업무와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형태의 작업장으로, 유럽 전반에서 시행 중임
 - 대부분은 민간 스타트업이 공공 보육시설과 협업 계약을 통해 제공되는 코워킹 오피스(공유오피스, 셰어오피스, 워크센터 등)의 형태임(홍근석·김봉균, 2020)
- 2008년에 런던에 설립된 Third Door는 영국 최초의 육아 가능 코워킹 스페이스로, 육아서비스와 오피스시설 중 한 가지 혹은 모두 이용 가능함(홍근석·김봉균, 2020)
 - OFSTED(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인증을 받은 공식 보육시설로 보육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며, 자녀식사 등 보육서비스를 제공함
 - 회원제로 운영되며, 오피스 시설(데스크탑, 모니터, 와이파이, 프린터 등 기자재, 통화부스, 탕비실 등)과 보육 서비스(야외 체육 활동, 교육프로그램, 돌봄제공자 교육, 평가 관리)를 이용할 수 있음

• 표 4-9 | 유럽 내 육아연계형 공유오피스 사례 •

국가	도시	시설
독일	켈른	Cowoki
	베를린	JuggleHub
	라이프치히/베른	Rockzipfel
	프랑크푸르트	Cowork & Play
이탈리아	밀라노	Qf Cobaby at PianoC
	피렌체	Spazio Co-stanza
	바리	FeelGood Coworking
	로마	L'alveare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Gnome House
슬로바키아	블라티슬라바	Coworking Cvernovka
	슬로바키아	Unicare Coworking
스페인	그레나다	CoFamily Coworking
스위스	생 실피스	The Village
영국	런던	Third Door Second Home Cuckooz Nest
	버밍엄	ImpactHub
	캔터베리	Farm Work Play
	캠브리지	Incubyte

자료 : 강민정·박선미(2020). 스마트워크 정책 동향 - 주요국 원격근무를 중심으로

체코 투자청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 체코 투자청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은 멘토링, 컨설팅, 해외 행사지원 등 스타트업 성장과 해외진출 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구성됨
 - 2019년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140만 코루나(약 13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신청도 전년 대비 20% 증가함¹⁶⁾

-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요건은 ① 설립연수 7년 이하, ② 직원 50명 이하, ③ 프라하를 제외한 체코 내 소재, ④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기업임
- 주요 지원활동에 따라 체코 스타터(Czech Starter), 체코 데모(Czech Demo), 체코 매치(Czech Match), 체코 엑셀레이터(Czech Accelerator) 등 4개 프로그램을 2017년부터 신설·운영하고 있음

• 표 4-10 | 체코 투자청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

구분	내용
체코 스타터 (Czech Star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트업의 효과적인 성장 지원(최대 7개월간 지원) • 멘토링 프로그램 비용(40~350시간)의 95~100% 지원 • 재무, 경영, 마케팅, 법률 등과 관련된 컨설팅 비용의 95% 지원 • 파트너와 투자가 대상 네트워킹 행사, 워크숍, B2B 미팅 참여비 지원
체코 데모 (Czech Dem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트업의 국제행사(뉴욕 TechDay New York, 싱가포르 Unbound, 샌프란시스코 TechCrunch 등) 참여 지원 • 행사 및 전시회 참가 비용의 75% 지원 • 홍보비 지원(마케팅-홍보 자료비 75%, 번역비용 100% 지원) • 행사 참여를 위한 항공료 75% 지원 • 최대 20시간 멘토링 지원
체코 매치 (Czech Mat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가 대상 프로젝트 소개 및 네트워킹 지원 • 뉴욕, 싱가포르 등에서 투자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네트워킹을 가질 수 있는 비즈니스 회의 3회 이상 개최 및 참여 지원 •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지 외국 전문가 멘토링 10시간 지원 • 프레젠테이션, 투자자와의 협상기술,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언 등에 대한 멘토링(체코에서 진행) 최대 20시간 지원 • 해외 네트워킹 행사 참여를 위한 항공료 75% 지원
체코 엑셀레이터 (Czech Accelera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월간 실리콘밸리, 뉴욕, 런던, 싱가포르 등 해외 현지에서의 스타트업 생태계 경험 기회 제공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 해외에서 3개월간 최대 2명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 제공 • 현지 멘토링(20~39시간), 컨설팅(30~74시간), 워크숍(8~32시간) 제공 • 현지 네트워킹 행사 및 콘퍼런스 참여 지원(비용 75% 지원) • 항공료 75% 지원 • 마케팅 자료 번역 및 지적재산권 관련 컨설팅 비용 50% 지원

주 : 2020년 3월 기준 자료임
 자료 : KOTRA(2020), “주목받는 신성장 동력, 체코 스타트업 현황”

16) kotra, 2020.6.11., “주목받는 신성장 동력, 체코 스타트업 현황”

중국 베이징시의 ‘벤처캐피탈의 투자분에 대한 세금 면제’

- 동 제도는 투자기간이 길수록 법인세를 줄여주는 제도를 통해 스타트업들에 대한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¹⁷⁾
- 벤처캐피탈(VC) 등이 중관춘국가자주혁신시범구 내 스타트업에 투자해 5년 이상 지분을 유지하면 해당 투자분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해줌
- 또한, 3년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해당 지분의 양도소득이 VC 전체 소득의 50%를 넘으면 투자분에 대한 법인세를 50% 감면함¹⁸⁾

3. 사회적 인구증가 사례

신도시 건설 및 대규모 택지개발

- 아파트 재건축 완료 후 대규모 입주로 인해서 특정 연도에 주민등록인구가 평균 대비 급격히 증가한 사례임
 - 2008년 송파구(7.23%), 2020년 강동구(5.48%)
- 다음으로 신도시 건설 및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된 후 대규모 입주로 인해 주민등록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한 경우임(연평균 증가율은 부록 참조)
 - 경기 김포시(김포), 경기 파주시(운정), 경기 양주(양주) : 2기 신도시 건설
 - 경기 용인시, 경기 광주시 : 대규모 택지개발
 - 경기 하남시 : 미사강변·위례신도시 등 신도시급 택지개발
 - 경남 양산시 : 양산물금신도시
 - 경북 예천군 : 경북도청 신도시

17) 한국경제, 2021.1.8., “중 스타트업 5년 투자면 법인세 면제”

18) 한국경제, 2021.1.8., “중국의 실리콘밸리’ 중관춘 기업에 5년 투자하면 면세”

- 경기 시흥시 : 은계지구
- 부산 기장군 : 정관신도시, 일광신도시
- 부산 강서구 : 명지국제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 세종특별자치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2012년부터 정부기관이 차례로 이전함에 따라 인구가 증가한 사례임
 - 16개 중앙행정기관(9부, 2처, 2청, 1실 2위원회)과 20개의 소속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였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8월까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 예정임

• 표 4-11 | 세종특별자치시 인구 추이 •

(단위: 천 명,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종	7.99	27.81	35.07	15.25	15.24	12.15	8.42	4.48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세종특별자치시 이외에도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인구증가가 이루어진 사례가 존재함
 - 지금까지 조성된 10개의 혁신도시 중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인구가 최소 2개년 동안 5% 이상 증가한 지역은 전남 나주시와 충북 진천군임

• 표 4-12 | 전남 나주시, 충북 진천군 인구 추이 •

(단위: 천 명,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남 나주시	-0.36	3.32	8.29	6.31	5.49	3.39	0.72	0.83
충북 진천군	1.81	0.88	4.31	2.90	5.33	6.16	3.66	3.25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조성

- 대규모 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조성에 따라 인구가 증가한 사례임
 - 대구 달성군(2016년 13.24%, 2017년 11.50%) : 테크노폴리스 및 국가산업단지
 - 인천 연수구(2019년 5.83%, 2020년 5.70%) : 인천경제자유구역
- 경기 화성시의 경우 현대기아차, 삼성연구소, LG전자, 발안일반산업단지, 장안첨단 산업단지, 향남제약단지 등을 중심으로 대기업 27개, 중소기업 9,789개 등 총 9,816개 기업이 입주하였음¹⁹⁾
 - 이러한 대규모 산업단지와 함께 동탄신도시와 향남택지지구(배후주거지역) 등이 조성되었음

• 표 4-13 | 경기 화성시 주민등록인구 연평균 증가율 현황 •

(단위 :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경기 화성시	9.97	7.79	4.10	14.96	9.19	4.60	19.92	20.80	9.39	2.91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경기 화성시	2.16	1.69	0.91	2.00	10.29	7.44	7.83	9.79	7.47	4.89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국제공항 건설

- 인천 중구의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의 개항(2001년) 및 영종하늘도시 입주에 따라 인구가 증가한 사례임

19) <https://blog.naver.com/bsyi1960/222040072402>, “서해안 황금벨트 산업-주거 미래도시 ‘화성시’ 4차 산업혁명 이끌 핵심인프라 구축”

• 표 4-14 | 경기 화성시 및 인천 중구의 주민등록인구 연평균 증가율 •

(단위 :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인천 중구	-1.17	2.96	6.43	8.98	5.36	2.56	-0.42	-2.34	-1.18	1.10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인천 중구	0.74	5.41	9.25	3.86	2.29	0.66	2.39	3.81	10.32	3.40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인천국제공항은 2019년 말 기준 전 세계 88개 항공사가 취항 중이며, 52개 국가 내 173개 도시를 연결하고 있음
 - 2017년 기준 3단계 건설을 완료하고, 제2여객터미널을 개장하여 운영 중임
 - 제2여객터미널 확장 및 제4활주로 신설 등을 통해 2023년까지 연간 1억 명 시대를 대비한 건설 계획을 수립하였음(강동준·조승현,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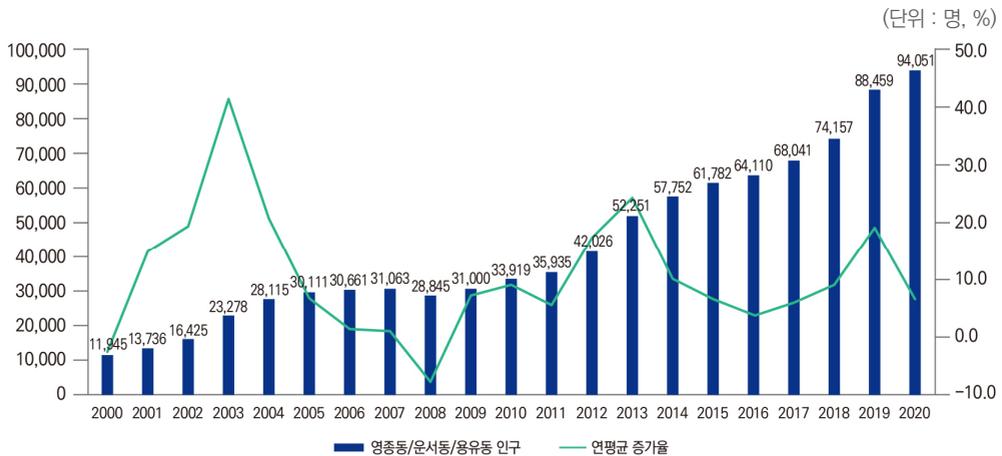
• 표 4-15 | 인천국제공항 현황 •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최종(누계)	
사업기간	'92~'00년	'02~'08년	'09~'17년	'17~'24년	-	
활주로	2개 (3,750×60m)	1개 (4,000×60m)	-	1개 (3,750×60m)	4개	
시설 규모	여객터미널	507천 m ²	-	387천 m ²	347천 m ²	1,241천 m ²
	탑승동	-	167천 m ²	-	-	167천 m ²
	여객계류장	60개소	49개소	54개소	62개소	225개소
	화물터미널	129천 m ²	129천 m ²	-	-	259천 m ²
	화물계류장	24개소	12개소	11개소	13개소	60개소
처리 능력	운항횟수	33만 회	17만 회	-	10만 회	60만 회
	여객	5,400만 명	2,300만 명	2,900만 명	1억 600만 명	
	화물	270만 톤	180만 톤	50만 톤	130만 톤	630만 톤

자료 : 인천상공회의소(2021)

-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인천 중구 영종동, 운서동, 용유동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음
 - 인천 중구 영종동, 운서동, 용유동의 인구는 2000년 11,945명에서 2020년 94,051명으로, 687.4%(연평균 10.9%) 증가하였음
- 특히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해당 동 지역의 인구가 연평균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01년 15.0%, 2002년 19.6%, 2003년 41.7%, 2004년 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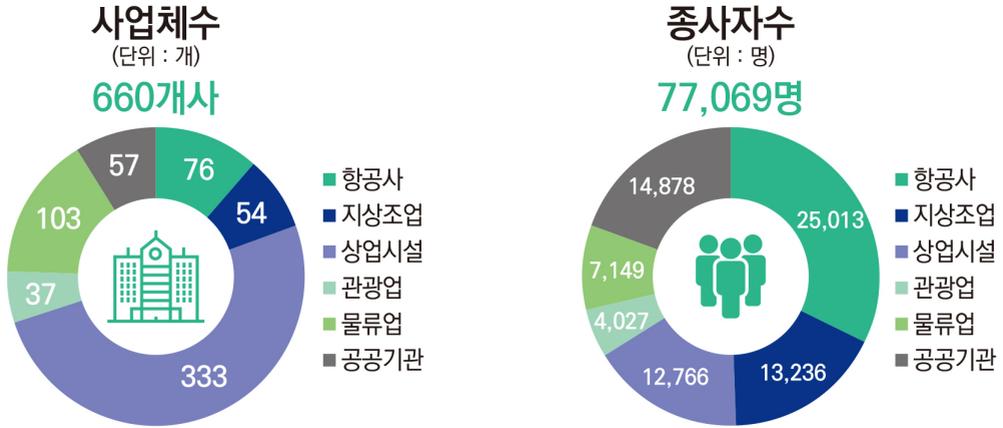
• 그림 4-1 | 인천 중구 영종동, 운서동, 용유동 인구 추이 •



자료 : 통계청(KOSIS)

- 2019년 기준 인천국제공항 관련 사업체는 660개이며, 종사자 수는 77,069명임
 - 이 중 항공산업의 직접 산업에 해당하는 항공사와 지상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130개(19.7%), 종사자 수는 38,236명(49.6%)임

• 그림 4-2 | 인천국제공항 관련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2019) •



자료 : 인천국제공항공사(2020), 내부자료(2019년 12월 기준) 강동준, 조승현(2020) 인천연구원 '코로나로 인한 항공산업 위기에 따른 인천시 지역경제 영향'에서 재인용



수도권 거주인구와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방안

1. 기본방향

- 첫째, 이 연구는 일자리 분야를 중심으로 수도권 거주인구 및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기본적으로 성별·연령별 특성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이유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부산광역시의 인구정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그러나 핵심적인 정책대안을 간략하게 제시하는 이 연구의 특성상 관련된 모든 분야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함
 -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부산광역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분야를 중심으로 수도권 거주인구 및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²⁰⁾
 - 특히 부산은 일자리에 대한 인구이동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큰 도시이기 때문에, 일자리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음
- 둘째, 이 연구는 다양한 연령대 중에서 15~34세의 청년층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설정 하였음
 - 부산광역시의 경우 청년층(15~34세)의 인구유출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최근 10년간 청년층의 순유출은 99,603명이며, 같은 기간 동안 총 순유출(206,085명)의 48%를 차지하고 있음

20) 2020년에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 50세 미만 2,01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일자리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음(홍근석·김봉균, 2020)

-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유출을 감소시키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유입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셋째, 이 연구는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역차별을 발생시키지 않는 방안을 중심으로 수도권 거주인구 및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부산광역시 인구정책은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해야 함
 - 따라서 부산광역시의 전체적인 도시경쟁력 제고를 통해 수도권 거주인구 및 기업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즉, 다른 지역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부산광역시에서 거주·생활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2. 추진방안

스타트업 지원을 통한 창업 생태계 조성

- 부산광역시는 일자리 증감과 인구 유출입 간의 연관성이 높은 지역이며, 신규 일자리는 기업유치와 창업 등을 통해 창출할 수 있음
 - 그러나 부산광역시의 산업구조는 비수도권이라는 지역적 한계로 인해서 대규모 사업체보다는 10인 이하의 영세 사업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임
 - 대기업 본사/공장 유치 등을 통해 지역 내 산업구조를 급격하게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창업 등을 통해 신사업을 유치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즉, 단기적으로는 대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창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부산광역시에는 규제자유특구와 창업촉진지구 등 기존 창업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효과적인 창업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임
 - 규제자유특구와 창업촉진지구의 교차지정 지역에 규제 완화와 창업지원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창업 더블 샌드박스’를 설치할 계획임
 - 창업 더블 샌드박스는 미래가 유망한 지역 전략산업 관련 초기 창업회사를 선별한 후 입주시켜 체계적으로 육성·투자하는 창업 종합지원 플랫폼을 의미함
 - 그리고 입주사의 창업 실패 시에도 반환 부담을 최소화하는 과감한 투자지원으로 국내·외의 혁신적 창업가를 적극 유치할 계획임

-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부산광역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함
 - 부산광역시 내 기업, 창업센터, 대학, 시민사회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정의하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큐베이팅 형식의 공모사업을 수행하게 함
 - 지역 전략산업과 관련된 문제 해결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공함으로써 짧은 시간 내에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음(홍근석·김봉균, 2020)

- 대만의 Suan-Lien 리빙랩 사례와 네덜란드 암스트레담의 스타트업 인 레지던스 사례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 대만의 Suan-Lien 리빙랩은 과학기술과 ICT를 대만의 고령화 문제에 접목시켜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복지 서비스 개발을 실험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음(홍근석·김봉균, 2020)
 - 대만의 Suan-Lien 리빙랩은 수면유도제품과 기억력 회복 게임 등 고령층 대상의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음
 - 다음으로 네덜란드의 스타트업 인 레지던스 프로젝트는 스타트업에 대한 6개월간의 지방정부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필수적인 수요를 해결하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임

- 지방정부가 지역 사회의 문제를 정의하면 스타트업은 제안요청서를 제출하고, 지방정부가 스타트업을 선정한 후 문제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6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운영함
- 6개월 종료 후 지방정부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낸 스타트업은 지방정부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함
- 또한 체코 투자청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나 중국 베이징시의 법인세 면세 제도 등도 참고할만한 사례임
 - 체코 투자청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은 설립연수 7년 이하의 직원 50명 이내 스타트업에 대해 멘토링, 컨설팅, 해외 행사지원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 체코 투자청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약 130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도 전년 대비 20%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나타냈음
 - 중국 베이징시의 스타트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벤처캐피탈의 장기적인 스타트업 투자분에 대한 세금 면제를 추진하고 있음
 - 즉, 벤처캐피탈 등이 중관춘국가자주혁신시범구 내 스타트업에 투자해 5년 이상의 지분을 유지하면 해당 투자분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있음²¹⁾

산·학·관 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 및 우수 기업 유치

- 부산광역시 인구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측면에서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청년층이 선호하는 우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자리 미스매치는 좋은 기업에 취업하려는 청년층과 우수한 인재를 원하는 민간기업 간의 니즈(needs)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임
 - 즉, 청년들은 임금 수준이 높고 근무환경이 좋은 우수 기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며, 우수 기업들은 자신들의 비전과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기를 희망함

21) 한국경제, 2021.1.8., "중국의 실리콘밸리' 중관춘 기업에 5년 투자하면 면세"

- 모든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지방대학의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수 기업들은 비수도권에 입지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따라서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수 기업을 유치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미국 뉴욕주의 ‘START-UP-NY’ 프로그램과 같이 지역대학과의 연계를 통해서 산·학·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뉴욕의 START-UP-NY 프로그램은 우수 기업 유치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대학 주변에 면세구역을 설치하고, 해당 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소득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산·학·관 협력 프로그램임
 - 2014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2019년 10월 기준으로 303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총 5,332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275백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음
 - 참여 기업들은 면세구역 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며,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짐
-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도 글로벌 대학도시 조성 등 부산의 대학자원을 활용한 인구정책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
 - 대학혁신연구단지 I-URP 조성, 대학 R&D 씨앗기획 사업, 공유대학 Uni-Park 운영, 월드클래스 육성 10년 프로젝트 등 다양한 측면에서 대학과의 연계·협력을 계획하고 있음
- 이러한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산·학·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제3기 인구정책 TF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에서 소멸위지역 자립역량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제 감면을 제시하고 있음
 - 즉,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의 경우 자율적인 특수 시책 및 제도를 발굴하여 특례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계획임

- 또한 부산광역시 내에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여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 대학자원을 활용한 보다 적극적인 산·학·관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및 우수 기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관광자원을 활용한 워케이션(warkation) 활성화

- 워케이션(warkation)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단순한 재택근무나 원격 근무를 넘어 휴양지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일을 하는 근무방식임(김동영, 2021)
 - 근로자의 여가생활 보장 및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하는 한편, 지역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임
 - 트렌드코리아는 원격근무를 의미하는 텔레워크를 2021년의 키워드로 선정하면서 워케이션 문화의 확산을 예상하였음
- 일본의 경우에는 2019년 7월 ‘워케이션 지자체 협의회’를 설립하고, 워케이션의 전국 단위 확산을 위한 사례 및 정보 공유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관계인구를 증가시키고, 이들이 향후 관광이나 고향납세 제도를 통해 해당 지역에 기여하게 만드는 것이 워케이션 확산의 취지 중 하나임
 - 와카야마현, 나가노현, 아키타현 유자와시, 시즈오카현 시모다시, 와카야마현 다나베시, 와카야마현 시라하마정, 와카야마현 구시모토정,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정 등이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최근 워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미국 실리콘밸리의 소식지인 ‘더 밀크’는 2020년 9월에 ‘파라다이스에서 일하세요, 워케이션 시대’를 통해 워케이션을 받아들이는 기업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 2014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캠핑지인 타호에 설립된 ‘타호 마운틴 랩’은 공동 작업 공간을 두고서 스키와 하이킹을 즐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워케이션 프로모션을 추진 중에 있음(김동영, 2021)

-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도 광안리, 해운대 등 자연관광지를 중심으로 워케이션이 가능한 지역과 시설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활용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향후에 민간의 호텔이나 리조트 등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국내외 교수, 연구원 등 전문직 연구인력의 휴가·안식년 등을 유치하고, 이 기간 동안 부산광역시 내 대학에서 강의 또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여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추진할 수도 있음(핀란드 알토대 사례²²⁾)
 - 워케이션의 확산은 관광지 숙박시설의 비수기 공실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으며, 체류인구 및 관계인구 증대를 통해 부산광역시 인구의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예비 창업가와 투자가 간 연계 프로그램 마련

-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즉, 예비 창업가의 창업 환경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부산광역시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과 해당 사업에 관심이 있는 투자가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가에게 ‘부산사랑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마련된 기부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기부자는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의 미래에 대한 투자가의 성격을 지님
 - 부산사랑투자 프로젝트에 기부한 기부자에게는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

22) 핀란드 알토대는 세계 석학에게 2주 휴가를 지내면서 강의를 할 경우 관련 비용 지원을 제안하고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픈 플랫폼 전략을 통해 알토대의 MBA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그램이 되었음(홍근서·김봉균, 2020)

-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고향창업가 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지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투자가의 기부금을 해당 지역 내의 예비 창업가에게 지원함
 - 창업가의 사업설립 초기자금에 필요한 경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고향납세를 보조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할 경우 총무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제공함(홍근석·김봉균, 2020)

-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창업지원 촉진 및 지역 문제 해결과 함께 기부금을 활용해 지역 밖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지역경제 선순환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음
 - 또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부산광역시에 수행하는 사업이나 창업 아이디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과의 연결 고리를 만듦으로써 관계·교류 인구의 확대를 꾀할 수 있음

참고문헌

- 강동준·조승현. (2019). 「코로나로 인한 항공산업 위기에 따른 인천시 지역경제 영향」.
- 강민정·박선미. (2020). 「스마트워크 정책 동향 - 주요국 원격근무를 중심으로」. 서울디지털재단.
- 관계부처 합동. (2021).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 김동영. (2021). 「리모트워크시대 도래와 전북유치전략」.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244.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0). 「주목받는 신성장 동력, 체코 스타트업 현황」.
- 박승규·박진경. (2017). 「일자리 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진경·김상인. (2018). 「전남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 추진방안」.
- 부산광역시. (2020). 「부산 인구활력 추진계획」.
- 부산광역시. (2021a).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투자 지원제도」.
- 부산광역시. (2021b). 「부산 인구정책 브리핑(창간호)」.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21).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 관계부처 합동.
- 안기돈·오정일. (2006). 「우리나라 15개 시도별 인구가동과 일자리 수 변화 간 인과관계」. 산업연구원 ISSUE PAPER 2006-216.
- 인천상공회의소. (2021). 「인천경제와 인천국제공항」.
- 제주특별자치도. (2020).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시행계획」.
- 하능식·최진섭·고은비·김병남. (2019). 「지방소득세 자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해외사례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 (2013). 「취업취약계층 노동시장정책 효율화 방안 연구」.
- 한주희. (2015).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IT관련 일자리 창출 정책: 테크하이어」. 한국노동연구원.
- 홍근석·김봉균. (2020). 「수도권 핵심생산연령인구 제주 이주의향 조사 분석 및 정책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Lee, Y. J., and H. Sugiura. (2018). Key factors in determining internal migration to rural areas and its promoting measures? A case study of hirosaki city, aomori prefecture. Public Policy Review, 14(1): 153-176.
- Masuda, H. (2014). Chihō shōmetsu: Tokyo ikkyoku shūchū ga maneku jinkō kyūgen(The Disappearance of the Region: The Rapid Population Decline brought on by Mono-Polar Concentration in Tokyo). Chuokoron-shinsha.
- Pesaran, M.H., Shin, Y. and Smith, R.J. (2001), Bounds testing approaches to the analysis of level relationships.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16: 289-326.
- World Economic Forum. (2017). Migration and Its Impact on Cities.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주요 지역별 주민등록인구 연평균 증가율 현황

(단위 : %)

연도	경기 김포시	경기 파주시	경기 양주시	경기 용인시	경남 양산시	경북 예천군	경기 시흥시	부산 강서구	부산 기장군
2001	10.08	5.64	8.32	9.80	5.18	-3.14	8.46	-3.32	0.27
2002	10.68	17.18	15.71	15.18	3.69	-3.01	6.07	-2.70	2.48
2003	7.22	4.67	5.43	16.37	2.62	-4.02	4.88	-3.59	0.29
2004	5.15	1.07	3.45	9.44	2.17	-3.76	4.06	-3.21	1.63
2005	2.36	3.65	3.06	11.33	1.55	-2.83	2.82	-3.02	2.78
2006	-0.46	6.27	5.24	8.31	4.03	-2.27	2.28	-1.65	0.40
2007	0.29	11.84	5.74	10.51	1.86	-1.44	0.84	-1.19	-0.96
2008	-0.88	3.78	5.95	4.40	2.44	-2.69	0.02	-2.54	0.29
2009	7.00	2.41	0.00	2.06	4.77	-1.79	0.56	0.65	2.00
2010	2.44	3.81	1.22	2.75	3.03	-1.43	1.31	15.75	10.13
2011	5.55	10.10	8.02	4.45	3.93	-0.54	1.48	3.68	14.74
2012	7.83	6.51	1.86	2.22	2.37	-1.00	-0.66	3.42	5.40
2013	11.84	4.07	-0.02	2.22	1.52	-1.19	-0.41	1.66	5.99
2014	8.65	1.91	-0.58	2.79	3.37	-0.99	-0.68	6.18	15.66
2015	8.97	2.40	1.47	2.08	4.58	-1.03	-0.54	13.95	9.24
2016	2.84	2.91	1.54	1.53	3.05	-0.95	0.92	18.83	5.77
2017	3.84	1.76	0.16	1.58	5.23	3.34	1.16	15.12	3.55
2018	7.88	1.64	3.23	1.31	6.78	6.69	4.16	7.78	1.97
2019	7.93	3.20	2.26	3.09	2.98	8.16	6.92	4.75	1.99
2020	3.32	0.49	2.47	2.37	0.61	3.43	5.57	5.38	-0.09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